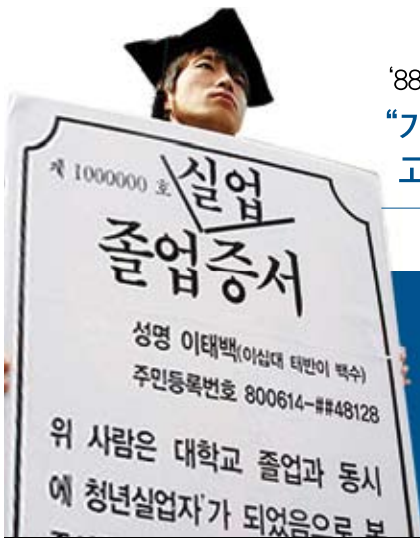




'88만원 세대' 청년실업자들
“기업과 정부나
고통분담하세요!”

▶ 8~9면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①
장하준 편 — 국가가
시장을 치료할 수 있나?

▶ 12면

정부, “자이툰 방식 아프간 재파병”
재파병 시도
저지 운동을 건설해야

▶ 6면

논쟁
진보 진영, 노동시간
단축 요구해야 하나?

▶ 11면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재현
인쇄인: (주)아미디 이송형
등록번호: 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중구 남창동 205-146 2층
대표전화: 02-777-2792
팩스: 02-777-0211
기사제보: 02-777-2791
E-Mail: left21@left21.com

Left21.com

2009년 4월 11일 ~ 4월 24일 | 제3호 | 값 1,000원

리포트21

부패원조 MB, 노무현 비리 공격할 자격 없다

부패한 민주당은 MB의 대안이 못 된다



노무현이 박연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고 있다. 이명박은 박연차 게이트를 통해 정적인 노무현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한편, 운동 내 민주당 지지자들을 주눅 들게 하려 한 듯하다.

사실 노무현 정부는 결코 “깨끗한” 정부가 아니었다.

기업들로부터 1백억 원이 넘는 선거자금을 받은 ‘희망돼지 사기극’을 시작으로 안희정과 나라종금, 양길승과 키스나이트, 최도술과 SK비리, 이해찬과 윤상림 골프 로비, 이광재와

썬앤문 비리, 러시아 유전개발 비리, ‘바다이야기’ 사건, 다단계 회사 ‘제이유’ 비리, 변양군과 신정아 게이트 등 비리들이 줄을 이었다.

다만, 이번 박연차 부패 추문은 아예 노무현 자신과 그 일가족이 직접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노무현과 민주당이 받을 정치적 상처는 심각하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명박이 박연차 부패 추문을 이용해 얻고자 한 정치적 목적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부패 문제를 들어 노무현 정부를 공격할 주제가 되는가.

이번 사건만 해도 노건평이 박연차 수사 무마를 위해 찾아간 사람은 현 정권 실세였던 추부길이었다. 추부길은 ‘형님’ 이상득에게 전 정권의 ‘형님’ 뜻을 전달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2007년 대선 직전 BBK 사건과 박연차 사건을 주고받으며 “‘로열 패밀리’를 보호한다”라는 ‘형님들의 밀약’이 있었다.

무엇보다 이명박 자신이 부패의 화신이다. 1972년 건축법 위반으로 구속된 뒤 1999년 선거법 위반과 법인 도포 등으로 형을 받을 때까지 도시계획법 위반, 업무방해, 폭력,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판결을 받거나 구속·기소·고발된 사건만 10여 차례가 넘는다.

서울시장 시절에도 ‘황제 테니스’로 논란을 빚었고 대선 당시에는 다스, BBK, 삼암동 DMC 등 대형 부패·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고 위장전입, 자식 위장 취업 등의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대선 직전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돈 한 톨 내놓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난 1년 동안 재산이 4억 원이나 늘었다.

▶ 3면으로 이어짐

<PD수첩> 표적 수사 중단하라

<PD수첩> 이춘근 PD 체포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발 여론에 주춤거리던 이명박이 다시 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다. 4월 8일 <PD수첩> 방송 원본을 찾겠다며 MBC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이다.

검찰 수사관은 MBC 노조원들의 강

력한 반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일단 철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PD수첩> 탄압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

당장 국무총리 한승수는 <PD수첩>으로 “전 국민이 많은 고통을 당했다”

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선일보>도 “왜곡보도로 온 나라를 근거 없는 패닉으로 몰아넣은” “4천만 국민에 대한 가해자”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 3면으로 이어짐

북한 로켓 발사

미국의 압박이 낳은 “위협”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 줬다.

성공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북한의 로켓의 사거리가 1998년보다 2배 증가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에 근접했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입증했다. 사실, 강대국이 주목했던 것도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 여부가 아니라 바로 미사일 능력이었다.

미국·일본·한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 실험이 실패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 이렇게 단정짓지 않고 있다. 또, 한국의 전직 고위 외교안보 당국자는 “미국의 주장은 향후 북한과의 협상 때문에 정확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북한이 핵미사일을 갖기 위해서는 핵탄두 소형화 등 핵심 기술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의 북한 적대나 무시가 계속된다면,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 준 군 우선 정책(선군)과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핵탄두 소형화 등은 시간 문제일 수 있다.

증정 다짐하는 오바마, 아스, 이명박의 위성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한·미·일 정부는 일제히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일본 아소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30분 만에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고, 미국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다시 한 번 규칙을 위반했다”며 “위반은 반드시 징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진정한 반제국주의 운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결코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과 그 동맹들은 북한을 비난하고 징벌할 자격이 없다.

첫째, 미국과 그 동맹들이야말로 대량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시범을 넘어 실전에 사용해 온 장본인들이다. 미국은 이미 52년 전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영국·프랑스를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은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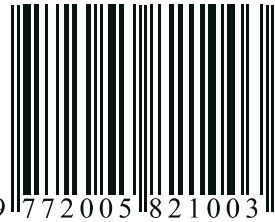
북한이 이번엔 인공위성을 성공시켰다 해도 그것은 미국에 비해 51년, 일본에 비해 39년이나 뒤진 것이다. 특히 일본은 1998년 북한이 ‘광명성 1호’를 발사하자 그것을 빌미로 군사 목적의 정찰 위성까지 쏘아 올렸다. ‘광명성 1호’는 성공 여부가 의심스럽지만 일본 정찰위성은 명백히 성공했다. 로켓 기술이 군사 용도로 전용 가능하다는 점을 일본에 적용하자면, 일본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로켓 실험에 대비해 최첨단 인공위성과 MD를 동원해 위협한 것만 봐도 대량살상무기 최대 보유국인 그들의 위선이 잘 드러난다.

남한 정부와 언론이 낙담 앞으로 다가온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KSLV-1의 발사에 대해 부푼 기대를 드러내면서 북한의 은하2호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것도 이중잣대다. KSLV-1은 2단형 로켓으로 1단 로켓은 러시아와 공동 개발한 것이고 상단 로켓은 남한이 자체 개발한 것이다. 남한 정부는 “위성 자력 발사국”이 되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도 군사 용도 전용이라는 목적이 숨겨져 있음은 물론이다.

▶ 4면으로 이어짐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

1부 1,000원

정기구독 : 1년 3만 원, 2년 6만 원

종합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연금 개악

고위직 재산은 늘리고
하위직 연금은 깎고

공직윤리위원회가 3월 27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지난해 행정부 고위공직자 1천7백82명이 재산을 평균 2천8백만 원이나 불렀다. 이들의 평균재산은 13억 원이나 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자들이 한 달 평균 2백만 원 넘는 돈을 모았다. 국회의원들은 평균 재산이 25억 원(1조 6천억 원을 가진 한나라당 정몽준 제외)이다. 이명박도 재산을 4억 원 이상 늘렸다. 국무총리 한승수는 월급 저축만으로 7천5백만 원을 모았다고 한다.

이런 정부가 우리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 복지를 줄이고 임금을 일부 반납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을 개악하려 한다.

지금 정부는 지난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단체들이 정부 개악안을 “사회적 합의”해 준 것을 활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악안이 “연금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 이해 당사자가 오랜 논의를 통해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전공노를 제외한 연금공투본 소속 단체들이 개악안에 합의해 주고 연금 개악 반대 투쟁에 나서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임금동결에 이어 임금반납까지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고통전가 속에서, 공투본 소속 단체들은 정부의 연금 개악을 정당화해 주는 “사회적 합의”를 폐기하고 연금 개악에 맞서 다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박천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세상을 오지경

“북한은 미사일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
- 이명박, ‘잡질’ 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조사받은 것 외에 다 털어놓아라’고 조언했다. 박 회장 본인도 [털어놓아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눈치”

- 박연자를 면회한 박찬중 변호사의
여당에 대한 은근한 압박

“무슨 음담패설을 그렇게나 심하게 하는지... 그렇게 심한 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 청와대 전 행정관들이
성접대 받기 전에 들른 식당의 사장

“재수 없으면 걸린다. 나도 [경찰청] 공보관 하면서 접대 많이 했다. ... 모텔에서 기자들 열쇠 나눠 주면서”
- 경찰청장 강화락

“성접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면 [기자들을 모텔에] 재우곤 했다. 피곤한 것 같아서 ...”
- 친절한 강화락의 공색한 변명

“[장자연] 리스트 속의 인물들은 여러 번 가실 다녔을 경험을 했을 것이다.”
- 그 심정을 너무 잘 아는 <조선일보>

“‘해당 언론사’라는 이름의 유명이 2009년 한국 언론가를 배회하고 있다. ... 모두가 알면서 동시에 아무도 모르는 ‘해당 언론사’라는 아리송한 용어”
- MBC 최용익 논설위원

“작년 여름 기자가 ‘요즘 무슨 책 읽느냐’고 물어 봐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주로 읽고 있다’고 답했는데, 얼마 뒤 이 책이 국방부 불온서적 목록에 올랐다.”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임태희

“내가 다닌 학교에서는 살인까지 났다. 이렇게 좌익을 척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할 수 있었다.”
- 3월 25일 ‘애국가동단’
발대식에서 국민운동본부 고문 민병돈

‘상습시위꾼’ 소환장 발부

MB의 ‘상습적’ 민주주의 역행 시도를 막아야

경제 위기로 인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과 분노가 언제 어디서 제2의 촛불이 되어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저항의 불씨를 짓밟으려 한다.

서울경찰청은 용산 추모 집회 도중 있었던 일부 시위대의 ‘경찰 폭행 사건’을 빌미로 ‘상습시위꾼’을 찾겠다고 나섰다. 촛불 단체 네티즌들을 이 잡듯 수사하고 다음 아고라에 시위 관련 글을 올린 네티즌 3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예전 집회 현장에서 채증한 동영상과 사진을 근거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민주노동당 전국학생위원장을 비롯해 네티즌 80여 명(<민중의 소리> 보도)과 대학생 20여 명 등 1백 명 넘는 사람들이 소환장을 받았다. 경찰이 ‘상습시위꾼’ 규모를 계속 확대 발표하는 것을 보아 앞으로 소환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이 말하는 ‘상습시위



4월 8일 이명박 정권 공안탄압 분쇄, 경찰 출석 소환 불복종 대학생 공동행동

사진 임수현

꾼’은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그야말로 집회에 나와서 재수 없게 카메라에 ‘찍히면 죽는’ 것이다.

이번 소환 대상자에는 용산 추모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지난해 촛불 집회 참가자와 대학생 등록금 집회 참가자까지 포함돼 있다. 이것은 명

백히 모든 저항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등록금 인하, 용산 살인 진압 책임자 처벌은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요구였다.

최근 정부가 이처럼 탄압을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저항의 기운이 싹

트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학생, 시민·사회단체, 촛불 시민들이 함께 올해 5월 1일 메이데이와 5월 2일 촛불집회 1주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투쟁으로 MB의 민주주의 역주행을 좌절시켜야 한다.

성지현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 전화 인터뷰

“이명박 정부는 독재 시대로 회귀하려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법을 비롯해 MB 악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통해서 법 제도를 과거 독재 시대로 회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안기구를 부활시키고 공안경찰을 계속 불릴 뿐 아니라 그 기능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죠. 또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자유를 계속 침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습시위꾼이라고 이름 붙여 범죄자 취급하는 것 자체가 문

제가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이를 자주한다고 범죄화하는 시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독재 정권들이 말기예나 했던 행동인데, 결국 국민의 원성과 분노를 살 수밖에 없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기구 내에서 유일하게 국가 정책을 인권이라는 보편적 기준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구라고 보거든요. 인권위의 또 다른 구실은 사회적 약자들, 장애

인·이주노동자·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 국가기구가 공신했게 [시정을] 권고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두 가지 구실 모두를 국제적·보편적 인권의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권위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비판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인원으로는 폭주하는 업무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말이죠.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신

의 정치적 기반인 재벌과 가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국민들의 보편적인 요구들을 잘라내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어둠은 있지만 크게 봐서 역사는 결코 뒤로 가진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촛불들이 그렇게 발언하고 사회에 던진 질문을 또다시 국민들이 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호중 기자 | rednuc@left21.com

정부의 낙태 권리 제한 시도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공격의 일부

보건복지부는 4월 3일, 낙태 허용 기간을 28주에서 24주로 단축하고 낙태 허용 질환의 수도 줄이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것은 명백히 낙태 권리에 대한 공격이다.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가 불법이다. ‘생명을 죽였다’는 비난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할 때 죄책감을 느끼고 의료혜택도 받지 못해 비싼 병원비를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매년 34만 건 이상의 낙태를 한다. 특히 최근의 경제 위기는 보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아이 낳기를 더 어렵게 한다.

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미혼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산모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

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갑자기 역주행을 하고 있다.

정부는 28주 미만의 태아도 독자 생존할 수 있다는 근거로 역주행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독자 생존’ 가능한 아기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은 의사도, 남편도, 정부도 아닌 바로 여성 자신이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회에서 출산과 양육은 대체로 여성의 몫이다. ‘미혼모’에게 쏟아지는 악의적 시선에 시달리는 것도, 원치않는 임신으로 고통을 받는 것도, 삶 전체가 얼크러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당사자도 바로 여성이다. 따라서 그 누구든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계속하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 만약 여성이 자신의 출산을 통제할 수 없다면 자신의 삶을 계획하거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은
의사도, 남편도, 정부도 아닌
바로 여성 자신이 해야 한다.

나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비록 후기 낙태(임신 24주 이후의 낙태)가 여성의 건강에도 해롭고 죄책감도 더 주기 때문에 낙태의 대부분이 임신 12주 이내에 행해지지만, 어떤 시기건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하려 한다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정부가 낙태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어 왔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도 성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지금 여성의 노동은 노동시장과 자본주의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이 사회의 필수적인 주춧돌이고 여성의 역할은 아이를 기르는 것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노동자이자 어머니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고, 남성의 61퍼센트밖에 안 되는 임금을 감수하고 있다. 경제 위기 때, 더 취약한 부분인 여성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려 할 때 이런 논리는 더 강화된다.

낙태 권리 공격은 이런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다.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청년과 노동자 들은 정부의 낙태 권리 공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최미진 기자 | lionlady@left21.com

종합

검찰의 <PD수첩> 압수수색 시도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보복

▶ 1면에서 이어짐

검찰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PD수첩>에 나온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베르니케 뇌병변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즉,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의해 사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또, CJD(크로이츠펔트야콥병)를 vCJD(인간광우병)로 오역했다는 혐의도 계속 씌우고 있다.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낯뜨거운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당사자가 바로 이명박 정부 아닌가.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747’ 대선 공약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가.

오역 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난해 미국과의 쇠고기 협정을 체결할 당시 농림부는 미국의 사료정책이 ‘더 강화되었다’고 오역을 해 국제적인 망신을 산 바 있다.

설령, 검찰의 주장대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베르니케 뇌병변이라 해도 사건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당시 미국 언론과 전문가 들조차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고, 이는 <PD수첩>을 고소한 농림부 전 차관보 민동석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조차 인정한 것이다.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PD수첩>의 보도를 문제 삼으려면, 민동석 등 농림부 관료들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호되게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

더구나 <PD수첩>의 PD들이 의사도 아닌데, 이들에게만 빈슨의 사인이 ‘베르니케 뇌병변인 것을 왜 몰랐느냐’ 식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처구니

없다.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에서 CJD를 vCJD로 바꾼 것은 문맥상 그녀가 의미하는 것이 vCJD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인터뷰 당사자에게 확인한 것이다. 정작 본인은 문제가 없다는 데, 검찰만 ‘오역’, ‘명예훼손’ 운운한다.

이처럼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PD수첩>을 탄압하는 “떼잡이” 검찰의 진정한 의도는 바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노동자·서민 죽이기 정책에 반대하는 어떠한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1차 압수수색 시도는 MBC노조 조합원들의 저지로 무산됐지만, 이명박은 탄압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시도 자체를 좌절시키려면 언론악법을 두 차례나 막아냈던 것처럼 강력한 파업 투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미친 탄압병”(〈이코노미스트〉)에 걸린 “4천만 국민에 대한 가해자” 이명박에 정면으로 맞서는 거대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8일 오전 검찰의 MBC 압수수색을 저지한 MBC 노동자들

사진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고려대 무기정학 대상 전(前) 출교생, ‘고대녀’ 김지윤 씨 인터뷰

“반대하면 잘라내기, 이명박과 고려대 당국 똑같아요”

고려대 당국이 지난해 3월 복학한 전(前) 출교생 7명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하려 한다. 이 학생들이 학교 당국의 출교와 퇴학 조치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2년을 무기정학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고려대 당국은 지난 2006년 4월 교수 ‘감금 사태’를 빌미로 그간 등록금 인상과 대학의 기업화 정책, 특히 삼성 이근희 명예철학박사 학위 수여에 반대해 싸워 온 학생 7명을 출교시켰다. 출교된 학생들은 부당 징계에 맞서 2년 동안 천막 농성과 법정 투쟁을 벌였고, 2007년 10월 출교 무효 판결에 이어 2008년 2월 퇴학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로 복학할 수 있었다.

김지윤 씨는 출교생 중 한 명이다. 김 씨에게 이번 무기 정학 징계 시도의 부당함과 배경에 대해 들어 봤다.

“2년 만에 복학해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졸업을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회 진출도 모색하면서 (레프트21)에서 수습기자 활동도 하고 있었죠. [함께 복학해] 졸업한 친구들도 각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올해 2월에 퇴학무효 판결이 나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우리를 징계의 늪에 빠뜨리려 한다는 생각에 정말 황당했어요.

“출교당했던 7명 중 3명은 이미 졸업한 상태예요. 학칙에 상벌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소환 대상은 학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졸업생들까지 징계하려는 것은 이 징계가 교육적 목적과 의도를 벗어났고 명백히 정치적이라는 것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요. 학교 당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줄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려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원에서 이미 ‘출교생들이 약한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들



김지윤 씨

에 비해 정도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요. 법정에서 학교가 낸 증거도 학생들의 패륜 행위를 증명하는데 부합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고 했어요. 애초에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고 해도 부당한 거죠.

또 법원에서 ‘근 2년간 천막농성 생활한 것이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얘기했는데 학교는 이런 법원 판결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법원에서도 조작이라고 인정한 ‘감금일지’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2년이나 사회진출, 학업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런 저희의 억울함과 고통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어떻게든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아서 징계를 내리려는 거예요.

그럼 무기정학도 무효 판결 나면 또 하나 낮은 징계를 내릴 건가요?

학내의 진보적 분위기 냉각시키려는 의도

“이번 징계는 학교가 잘못 내린 결정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받은 것에 대한 책임 회피용이에요. ‘원래 애내는 무기정학 받을 만한 애들이다’ 이런 식으로 낙인

찍는 것이죠.

그런데 3년 전 일까지 끄집어낸 것은 단지 우리에게 대한 괴롭힘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지난해 6월 10일에 고려대 학생들은 동맹휴업을 성사시키고 수천 명이 촛불집회에 참가해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어요. 고려대가 이명박 모교이고 재단과 교우회는 명비여천가를 부르면서 이명박 라운지가 있는 바로 그 학교에서 동맹휴업이 성사되고 ‘MB 아웃’을 얘기한거죠. 이런 급진화 흐름 속에서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등록금 인하와 이명박 반대를 분명히 주장하는 이른바 좌파적 총학생회가 압도적으로 당선했어요.

얼마 전 학내에서 열린 등록금 인하 총궐기에 5백여 명이 왔다고 해요. 2006년 출교 반대 집회 이후 가장 큰 학내 집회였어요. 학교와 재단은 학내에서 진보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가 달갑지 않았을 것이고 징계 조치로 학내 분위기를 냉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최근 이명박 정부가 미네르바 체포, <PD수첩> 제작진 체포, YTN노조 탄압, ‘전문시위꾼’ 체포 등으로 사회 분위기

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에게 반대하면 법과 원칙 없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것, 지금 고려대 당국이 저희에게 하고 있는 것과 똑같죠.

“교우회와 일부 보수적 교수들이 제가 이명박을 비판하고 다니는 것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사실 고대 후배가 선배를 비판한다는 것에 상징성이 있잖아요. ‘재네를 풀어 준 것 때문에 재가 고대생이라고 설치고 다니고 지금 이명박 정부 공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짜증을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4월 5일 고려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학생대표자들이 부당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2일 기자회견에는 전국대학노조, 고대 병원노조·시설관리노조 등 노동자들도 참가해서 부당 징계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하셨어요.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 노동자들이 함께 출교를 철회했을 때처럼, 연대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봐요.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어요. 학교 당국이 저희가 2년 동안 겪은 고통은 아랑곳 않고 오히려 주홍글씨를 새기려는 걸 보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현주 기자 | hyunju43@left21.com

북한 로켓 발사와 동북아 정세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저자) 기고

미국의 대북 적대기가 키운 북한 “위협”

북한은 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가?

▶ 1면에서 이어짐

미국과 그 동맹들이 북한을 비난하고 징벌할 자격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1991년 걸프 전쟁을 마친 미국 합참의장 콜린 파월이 “다음 차례는 북한”이라고 지목했을 때만 해도 북한은 아직 핵무기도, 중거리 미사일도 갖지 못한 나라였다. 그 뒤 18년 동안 북한은 전보다 더욱 가난해졌는데도 핵무기 보유국이자 장거리 미사일 능력 보유국이 됐다.

왜 그랬을까? 2003년 6월 미국 의회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관리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은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2002년 1월 이라크·이란·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미국이 1년 만에 이라크를 침략하고 사담 후세인을 체포해 결국 사형시켰으니, 북한 당국이 이런 결론에 이를 만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 캐린 엘리엇 하우스 같은 미국의 매파도 이 점을 인정한다. “이라크 전쟁으로 김정일이 얻었을 게 확실한 교훈이 있다. 사담 후세인의 경우와 달리 자신을 지킬 방법이라고는 자신에게 핵이 있다고 믿을 만한 고백과 함께 그 핵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공포를 대외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을 “부시 외교의 대실패”라고 부른다. “강력한 경고만 남발하면서 실제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미국 전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

실제로, 2002년 부시 정부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은 제네바 합의(1994)에 의해 당시까지

동결하고 있던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잠재적 핵 공격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제국주의적 압박과 위협을 서슴지 않자 핵무기 개발에 나섰던 것이다.

핵실험 전에 북한은 핵무기 보유 선언과 미사일 실험 등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고자 했지만, 미국은 무시 정책으로 일관하며 금융제재 등 압박을 지속했기 때문에 북한은 결국 핵 실험에 돌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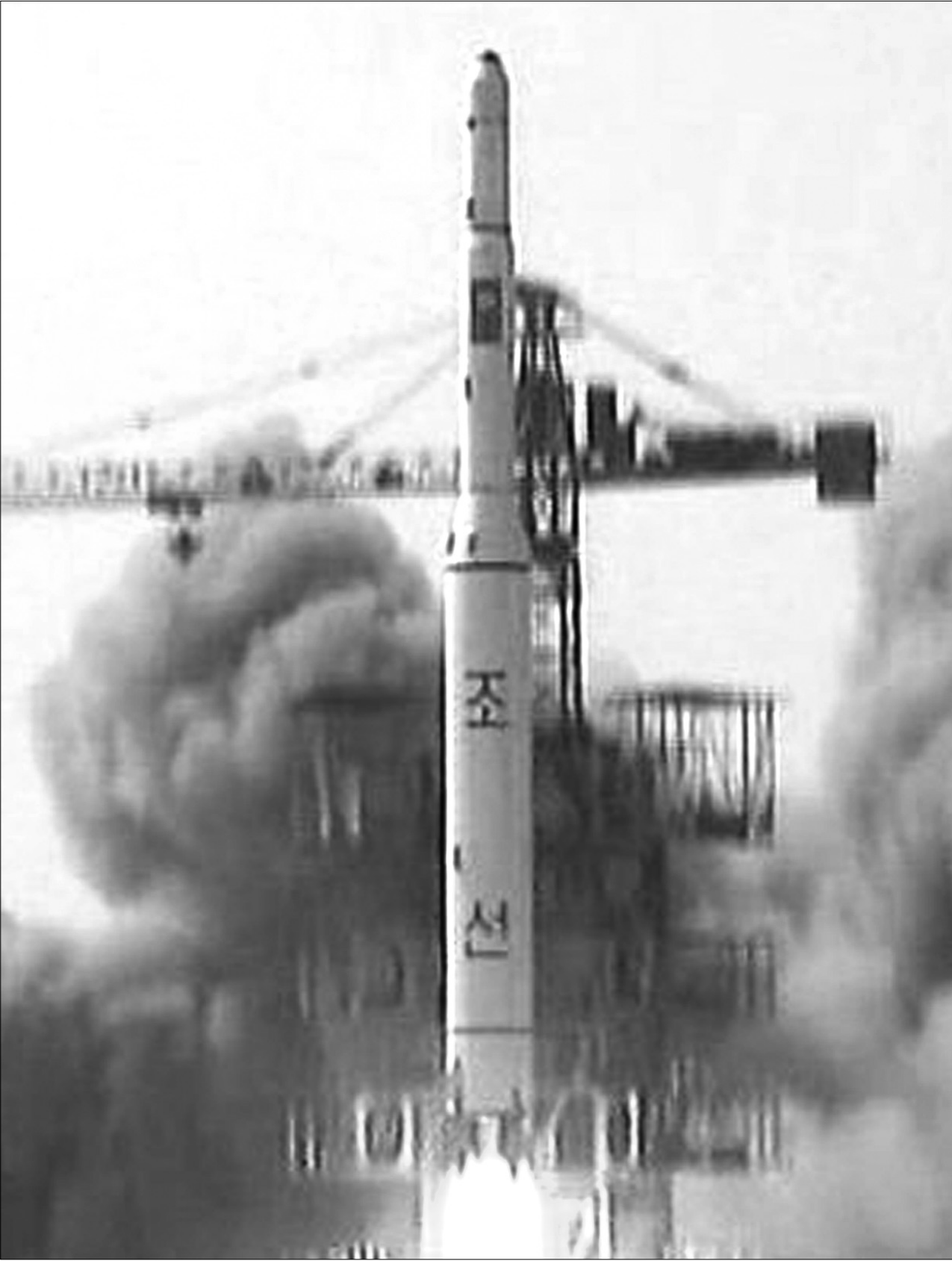
“후세인의 이라크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부시 외교의 대실패”라는 국내외 비난에 직면한 부시는 이라크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가 바로 2·13 합의였다.

그렇다면, 핵 불능화에 들어갔던 북한이 왜 다시 로켓을 발사한 것일까? 2·13 합의도 북미 간에 이뤄졌던 지난 합의와 약속들처럼 지지부진과 불이행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2·13 합의는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로 이미 파국 직전까지 한 번 갔었다. 미국은 북한이 핵 불능화를 중단하고 핵시설을 원상복구하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테러지원국을 해제해 줬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6자회담 결렬로 2·13 합의는 다시 난관에 빠졌다. 미국이 들고 나온 핵신고 검증 문제가 또다시 문제가 됐다.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2·13 합의에 따른 에너지 지원 약속도 완수하지 않고 있다.

사실, 지난 18년간 북미관계는 긴장과 협상이 갈마들며 위기가 심화해 온 과정을 밟았다. 긴장이 고조되면 대화 국면이 조성되지만, 협상의 지지부진과 합의의 불이행으로 다시 긴장이 증폭되는 식이었다.



오바마는 다를까?

오바마의 등장은 북미관계에 서광이 비치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관측을 불러일으켰다. 누구는 이명박의 대북 강경 기조를 비난하며 ‘한미공조’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을 ‘부시 외교의 실패’라고 했던 오바마는 취임 몇 개월이 지나도록 북한 로켓 발사를 막지 못했다.



키 리졸브 훈련 중 박격포를 설치하고 있는 미군과 한국군 사진 제공 민중의 소리

오바마가 그저 전 정권의 실책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바마는 아직도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지 못한 채 시간을 끌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거듭해서 북한은 미국이 호지부지 시간 끌다가 북미합의를 파탄으로 몰아간 경험을 해 왔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얼핏 드러난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지난 18년과 다른 전망을 보여 주지 않는다. 오바마는 일본을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초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일 동맹 강화는 동북아 불안정을 강화해 온 요인이며, 대북 적대를 배경으로 이뤄져 왔다. 또, 오바마 정부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제거”를 목표로 삼고 있고, 이를 위해 군사적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뒤 한미연합사령관 윌터 샤프는 “전면전은 물론이고 북한의 핵무기 통제력 상실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3월에 열흘 넘게 지속된 키 리졸브 훈련도 강행했다. 북한 당국이 “키 리졸브 철회 여부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대조선 적대시 정책

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고 하는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는데도 말이다.

흔히 오바마 정권의 대북정책을 “클린턴 3기”라고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클린턴 시절 북미 관계가 평화로웠던 것처럼 기억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아마도 2000년 북미 합의를 부시가 극적으로 뒤집은 인상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가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던 1994년 봄은 미국 민주당 클린턴 정부 집권기였다. 현재 미국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은 당시 퍼스트레이디로 백악관에 있었고, 미국의 대북 전쟁 계획은 남한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1998년 북한이 ‘광명성 1호’를 발사했던 것도 클린턴 정부 시절로, 미국이 1994년 체결한 제네바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8년 동안 집권했던 클린턴은 집권 말년에 가서야 미사일 협상을 시작했고, 그나마 북미협상은 중동 문제에 밀려 완수되지도 못했다.

사실,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부시 정권 말기 대북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동에 발이 묶여 북한과 대화하는 것말고는 별 대책이 없는 것이다.

제재는 해결책이 아니라 악수

미국과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끌어내려 하겠지만, 제재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IMO(국제해사기구) 등에 방향과 궤도까지 미리 통보한 로켓 발사를 “징벌”하기가 군색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동참 없는 제재는 종이 호랑이기 십상인데도, 한·미·일 독자 제재론이 흘러나온다. 이런 시도는 추가적 핵 또는 미사일 실험 등을 불러 사태를 한층 악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금융제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2006년 핵실험의 악몽을 되살린다. 당시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 중이었고 이를 둘러싼 긴장이 극심했다. 일본은 추가할 게 없을 만큼 이미 충분한 제재를 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불과 며칠 전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사적 대응에 반대한다고 하더니 로켓 발사 이후 다시 오락가락하며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방침을 굳히고 있다.

PSI는 2003년 부시 정부가 “불량

대북 제재는 추가적 핵 또는 미사일 실험 등을 불러 사태를 한층 악화시킬 수 있다.

국가들에게 운송되는 의심스러운 물품을 차단하겠다”며 제안한 대표적인 일방주의 정책으로, 당시부터 북한은 이를 봉쇄 정책으로 여겼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군사적 충돌을 우려해 PSI 전면 참여를 유보해 왔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를 뒤집는다면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또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공안통치를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려 할 것이다. 탄압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라도 진보 진영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제국주의적 압박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명박의 북한 비난과 제재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물론 위험천만한 도박에 뛰어들려는 이명박 정부의 PSI 참여에도 반대해야 한다.

핵과 미사일은 평화 지렛대?

북한 로켓 정국은 일시적 냉각기를 거쳐 북미 협상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 정부의 악수로 냉각기가 길어지거나 사태가 악화될 수도 있지만 한 바퀴를 돌아서라도 결국 협상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정부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의 로켓 발사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 “미사일 소란이 진정된 뒤 장기적인 정책 우선순위의 6자회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또 하나의 전선을 형성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중동과 파키스탄 문제에 발이 묶여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동에 데려가기를 원하지 그 역은 아니다. 북한 당국은 군사 옵션을 집어들이기 어려운 미국의 처지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국면이 다시 시작된다 해도 그것이 결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난 20년처럼 북미 협상에는 난관이 많을 것이다.

우선, 중동과 파키스탄에 비해 북한은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협상이 질질 끌 우려가 있다. 오바마의 대통령 인수위원장 존 포데스타 미국진보센터(CAP) 소장이 당선 1개월 안에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썼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그러지 못했던 것은 앞날을 훔쳐 보여 준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추가적 핵 또는 미사일 실험을 고려할 수 있고 위기는 증폭될 것이다.

둘째, 협상 과정에서 검증(사찰) 같은 민감한 문제가 불거져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1994년 6월 전쟁 위기의 직접적 발단도 특별 사찰 문제였다. 북한은 비핵화 최종 단계에서 남한도 사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수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인권 문제 등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셋째, 미국이 북한 핵무기 제거와 미사일 협상에 필요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이것은 미국 제국주의의 쇠퇴를 반영한다. 미국이 이라크를 재건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이라크 안정화 실패의 한 요인이었다.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보상을 나누려 하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경제 사정이 나빠지는 마찬가지다.

넷째, 북한의 로켓 발사를 발미로 일본과 남한 정부가 추진할 군비 증강은 동북아 긴장을 강화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방위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일본의 방위 예산 증액은 중국을 자극할 것임이 분명하다.

남한 정부는 미사일 사거리 300km 제한 완화, 패트리어트3 미사일 도입 등 ‘한국형 MD’ 건설을 공언하고 있다. 조중동은 “남북 미사일 ‘공포의 균형’ 시급하다”며 일제히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민간용 로켓의 경우 이미 사거리 규제 없이 무제한 개발·시험발사·생산할 수 있다. 군사용 미사일에 사용되는 고체연료 방식 사용 불가 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KSLV-1의 2단 로켓은 고체연료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번 로켓 발사는 북한이 사회주의 사회이기 커녕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일부라는 것도 보여 줬다. 북한은 아이들이 굶주리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엄청난 물자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쏟아붓고 있다. 이런 비극은 제국주의와 이윤 체제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계속될 것이다.

진보 진영의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북미 협상을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위기를 증대시키는 위험한 게임일 뿐 진보 세력이 택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이 아니다.

제국주의와 이윤 체제 주관자들의 회담을 통해 평화를 이룰 수도 없다. 진정한 해결책은 미국 제국주의의 전략에 반대하고 이명박의 친제국주의 정책에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

종합

개혁주의의 모순을 보여 준 진보신당 강령

진보신당이 3월 29일 당대회를 통해 강령을 최종 확정했다. 진보신당의 강령은 강력한 재분배 정책, 토빈세 실시, 주요 생산수단의 사회화, 자주관리, 침략전쟁 중단 등을 담고 있다. 대체로 괜찮은 좌파 개혁주의 강령들이다.

진보신당 내부에서는 일부 강령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이견도 적지 않았던 듯하다.

‘사회민주주의 공개정파를 준비하는 모임’은 “노조가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주관리’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그들은 또 “강령 본문에 꼭 담아야 할 경제 성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진보신당 당원들은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에 대해서 불편해했다. “자본주의 극복” 구절을 “자본주의의 병폐 극복”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좌파 개혁주의 강령을 성취하려면 체제 자체에 도전해야

그러나 진보신당의 좌파 개혁주의 강령을 현실에서 성취하려면, 또 진보신당이 소중하게 여기는 4대 가치인 평등·생태·평화·연대를 실현하려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진보신당의 강령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자본주의의 그 자체보다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주된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 토빈세 부과, 생산수단의 사회화, 강력한 재분배 정책은 그 자체로는 반자본주의 조치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자본주의 자체와 진지하게 대결하지 않고서는 성취할 수 없다.

진보신당 강령이 “신자유주의 세계”가 낳는

위기는 “오직 자본의 지배 자체를 극복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그래서 전적으로 옳다.

그런데 진보신당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적 사회 논리를 추상적 문구로 대체했다 — “인간의 자유와 참된 만남의 공동체”.

진보신당이 “자본주의 극복”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스탈린주의의 재앙에 대한 그릇된 평가에서 비롯한 것일 수도 있고, 진보신당 안에 있는 정치적 이견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다.

아이러니인 것은 현 진보신당 지도자 중 다수가 과거 민주노동당 강령에 사회주의(“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를 포함시키고 2003년에는 그 사회주의 강령 삭제 시도에 반대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또, 진보신당 내부 여론조사에서 27.7퍼센트의 당원이 진보신당이 “노동자 계급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답했는데, 이번 강령 채택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을 가장 잘 묘사하는 말은 사회주의다. 진보신당 강령이 제시하고 있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사회주의 사상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다. 대기업들과 그들의 로비스트들은 경제적 소유권의 중요성을 매우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예컨대, 지적재산권을 위해 그들은 매우 공격적으로 싸운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적 사회 경제 체제에서는 주요 생산 자원이 민중적 토대 위에서 사회적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곧 사회주의라는 점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자본주의 극복”

을 말하지만, 그 대안은 모호하다.

한편, 진보신당 강령은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단과 방법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진정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면 근본적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 반면, 진보신당은 자본주의를 개혁해 “자본의 지배 자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듯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개혁 운동은 그 자체에 내재돼 있는 고전적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 자본주의 재생산의 요구조건이 개혁 운동이 이를 수 있는 한계를 정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는 1930년대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만큼 지배계급이 양보할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물론 이 말이 개혁의 가능성이 원천 봉쇄됐다는 뜻은 아니다. 체제 유지 자체가 위험한게 되면, 자본가들은 국가가 개혁을 양보하도록 용인할 것이다. 자신들을 위협한 운동에 반격을 가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거듭 강조하지만, 경제 위기 시기에 개혁 운동이 실질적 양보를 얻어내려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동이 발전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조직 노동자 계급 중심의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 이들이야말로 경제와 국가에서 자본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권력에 효과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진보신당 당원이 지적했듯이, “만남 강령에서 전반적으로 계급적 관점이 흐릿해”졌다.

진보신당의 강령은 훌륭한 좌파적 개혁 과제를 담고 있지만, 개혁주의의 한계와 모순도 함께 보여 준다.

김인식 kis@left21.com



3월 29일 진보신당 당대회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통쾌하게 승리하다

지난 4월 8일 치러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이명박의 ‘특권교육’을 확 바꾸겠다”며 ‘MB식 교육정책 반대’를 전면에 내세운 김상곤 후보가 당선됐다. 특히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추종한 김진춘 후보를 7만여 표 차이의 큰 표 차로 따돌린 통쾌한 승리였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진보연대, 민주노총,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촛불 운동에서 활약했던 온라인 카페 안티2MB, 소울드레서 등의 공개적 지지를 받으며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거 운동을 펼쳤다.

국제중·특목고·자립형사립고 증설 반대, 일제고사 반대, 공립 유치원 증설, 학생 인권 보호 등을 주장하며, 부유층·특권층만을 위하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

사진 제공 민중의 소리

사교육비 부담만 증가시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을 분명히 반대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

게다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대량 해

고 반대 투쟁을 준비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명박을 비판하는 선거 운동을 벌이는 등 진보 후보로서 면모를 보여 주기도 했다.

그래서 이명박과 정치권에 대한 환멸이 낳은 기록적인 낮은 투표율 속에서도 진보 후보가 승리한 것이다.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와 정책 대한 반감이 광범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 줬을 뿐 아니라 민주당이 박연차 비리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결한 진보 진영이 이명박에 맞서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값진 승리였다.

이를 계기로 다가오는 올산 재보선에서도 반드시 진보 후보 단일화와 승리가 이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진보진영의 단결과 투쟁이 강화돼야 한다.

강동훈 기자 | kah@left21.com

‘테러와의 전쟁’

이명박 정부, “아프가니스탄에 자이툰 방식 재파병 방침 정해”

재파병 시도 저지 위한 운동을 건설해야

G20정상회담 전에 **〈동아일보〉**는 정부가 자이툰 부대 방식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기로 결 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무렵 오바마는 주둔 병력 증강을 골자로 하는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발표 했고, 외교부 장관 유명환은 아프가니스탄 재건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G20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는 이명박에게 아프가니스탄 지원 요청을 했다.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6월로 예정되 있는 이명박의 방미 선물이 될 개연성이 크다. 그 대가로 이명박은 오바마로부터 한미FTA 비준을 얻어내려 할지도 모른다.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한국군 파병을 반대해야 하는 까닭을 알아본다.

김용욱 기자 | ohotonge@left21.com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한국인을 테러의
표적으로 만들 것

이명박 정부가 정확히 어떤 형태로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지원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일단 이명박은 '테러와의 전쟁'의 연장선에 지나지 않는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신전략이 완전히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정상회담장에서 이명박은 예멘 테러를 예로 들면서 "테러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점령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의료봉사단, 직업훈련 요원들이 가서 활동하고 있고 경찰 훈련 인력과 장비가 출발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앞으로 파키스탄 문제는 협의해 나가자”고 말하며 파키스탄에서 ‘테러와의 전쟁’ 지원 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은 것이다.

이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그 열흘 전에 알카에다 아라비아가 예멘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죽인 주된 이유 중 하나로 한국 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지원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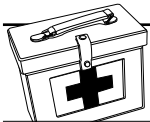
아프가니스탄인과 파키스탄인들이 '테러와의 전쟁'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테러리스트가 부산에 숨었다고 부산을 폭격해 희생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테러리스트가 생겨난 것 자체가 미국의 책임인데 말이다.

〈동아일보〉 보도처럼 이명박 정부가 군대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면 더 큰일이다. 3월 27일치 〈동아일보〉는 이명박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명박 정부가 공병 1천 명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보도했다.



4월 4일 국제반전공동행동

사진 이미지



재건 지원? 전쟁의 일부일 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든 이명박은 '테러 박멸'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 지원으로 가장한 경찰 교관 파견이든 공병 파병이든 아프가니스탄 점령 지원은 본질적으로 군사작전의 일부이며 아프가니스탄 저항 세력에게 당연히 점령 세력의 일부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현재 바그람에서 활동하는 지역재건팀(PRT)을 보자. 일부 언론은 군사지원이 아니라 PRT지원이면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주장해 왔다. 그러나 PRT에 속한 민간인들은 기본적으로 보안을 위해 점령군의 보호에

의존해야 한다. 2004년 당시 미 국무 장관 콜린 파월은 PRT에 소속된 민간인들을 “우리 전투병력의 중요한 일부”라고 불렀다. 예컨대 미군은 종종 저항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인도주의 물자를 배급했다. 당시 ‘노르웨이난민위원회’ 일원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주의 사업에 참가한 코너 폴리는 “2004년 이후 모든 인도주의적 사업이 대(對)게릴라전의 일부가 됐다”고 회고했다.

더구나, 한국 PRT의 근거지인 바그람 기지는 아프가니스탄판 판타나모 수용소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미군은 이 공군기지를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002년에 수감자 2명이 고문으로 사망하면서 바그람의 악명이 외부에 알려지기도 했다. 2007년 적십자 보고서는 바그람 수감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고발했다. 지난 4년 동안 바그람 수감자 수는 4배나 늘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패배가
한반도 평화에 이롭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미국의 점령을 지원해선 안 된다. 부시가 이른바 ‘악의 축’인 이라크·이란·북한 3개국 중 이란과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오바마는 '악의 축'이란 단어를 더는 사용하지 않지만 대북 압박은 중단하지 않는다. 오바마가 북한을 군사 공격하지 않는 것은 일단 아프가니스탄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면서 무력 충돌

을 통해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유혹이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이 보여 준 것처럼 강대국 간의 충돌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가 최근 보인 러시아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는 일단은 아프가니스탄에 집중한 중하기 위한 시간별기용일 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중동과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전쟁의 성패가 미국 제국주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 주는 사례다. 미국이 이곳에서 승리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와 경쟁에서 훨씬 호전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 이것은 한반도·동유럽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미국이 이곳에서 패배한다면 반전 운동은 훨씬 유리한 고지에서 제국주의 체제에 맞선 투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제국주의의 승리를 지원하는 이명박의 재파병을 막는 투쟁이 중요한 이유다.

아프가니스탄
— 미국의 식민지

미국과 이영박 정부가 뭐라고 말하건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식민지다. 2001년 부시는 9.11 테러의 책임을 물어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했다. 결국 미국은 9.11 테러에 책임이 없는 무고한 아프가니스탄인을 3만 명 이상 죽이고 난민 1백 50만 명을 발생시켰다. 당연히 저항이 일어났고 점령군은 무자비하게 대응했다. 2008년에는 개전 이후 가장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카르자이는 형식상 선거를 통해 뽑혔지만 미국의 총독이다. 그는 미군 경호원 없이는 수도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카불 시장'이라 불려 왔다. 최근 이 꼭두각시

가 탈레반과 정치적 타협을 요구하는 등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자 미국 정부는 대통령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요직을 신설하려 했다. 이 요직의 인사는 지방 재정 통제권을 가진 제2의 총독으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상관없이 직접 점령군의 명령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민주정부가 아니라 식민정부다.

현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끔찍하게 부패했고 억압적이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건설 사업을 조사한 회계사는 케밥(터키식 샌드위치) 1인분이 1천 달러(약 1백35만 원)로 계산된 것을 발견했다! 지방 정부 관리들은 가난한 소농의 토지를 빼앗고 있다.

최근에는 반여성적 법안 제정 시도가
정점이 됐다. 카르자이의 이 법안은 실제
로 끔찍하다. 오바마는 이 법안에 분노를
표했지만 미군 점령 이후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처지는 조금도 나이지 않았
다. 이라크의 친미 정부는 비슷한 법안을
이미 오래 전에 통과시켰지만 별다른 항

의를 받지 않았다. 이번에 큰 쟁점이 된 것은 카르자이가 제국주의 정상 눈 밖에 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의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전략은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목표를 알카에다와 알카에다와 연관된 탈레반 소탕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그 대안으로 전쟁의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를 내놓았다. 알카에다 소탕을 위해서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폭격을 강화하고, 테러세력이 파키스탄에 뿌리내리는 것을 막아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손에 넣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파키스탄 공격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베트남 전쟁 말기 캄보디아 폭격을 정당화한 것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았다. 당시 미국 정부는 위기에 빠진 베트남 전쟁에서 어떻게든 승리할 최

후 수단으로 캄보디아와 라오스 폭격을 시작했다. 남베트남에서 게릴라들이 패배하지 않는 것은 미군 점령의 현실 때문이 아니라 게릴라들이 캄보디아를 재충전 근거지로 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폭격 결과 캄보디아 상황이 극단적으로 불안정해지며 수백만 명이 죽었다.

불안정해지는 파키스탄

지금도 미국이 '안정'을 말하며 개입을 강
화할수록 파키스탄은 불안정해지고 있다.
물론 파키스탄이 캄보디아는 아니다. 막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인구 1억 7천만 명
의 핵무장 국가다. 알가예다나 탈레반이
이 국가를 당장 전복시킬 수 있다는 미국
정부와 일부 언론의 주장은 황당하다.

그러나 파키스탄 사회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지역 갈등, 사회적 불평등과 미군 점령이 낳은 이웃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이 결합되면서 파키스탄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미군의 접경지 폭격에서 발생한 사상자 다수가 무

고한 파키스탄 민간인들이고 무인 폭격기가 파키스탄 정부 동의 아래 파키스탄 공군 기지에서 발진했다는 소식이 폭로되면서 접경 지역에서 탈레반 동조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파키스탄 탈레반은 미군의 무인 정찰기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파키스탄에서 폭탄 테러를 저질렀다.

최대 5천 명을 추가 파병하기로 한 유럽 나토 회원국들도 파키스탄 확전에 연루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 오바마는 그들을 파키스탄 작전에도 끌어들이고 싶어한다. 4월 17일 파키스탄 지원국 회의는 이를 위한 사전 포석이다.

중요한 점은 동맹국들이 직접 파키스탄 군사작전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의회의에서 논의할 지원금은 파키스탄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 계속 참가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제공될 것이기 때문이다. IMF에 손을 벌려야 할 정도로 다급한 파키스탄 정부에게 이것은 피하기 힘든 압력일 것이다.

G20의 조치들은 세계를 구할 수 없다

국가 부도시 IMF 대출만 겨우 합의했을 뿐

주류 언론들은 G20 정상회담이 대 성공이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기업주들의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G20 정상회담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불황에 맞서 용감히 싸웠다”고 평가했다.

의장국인 영국의 총리 고든 브라운은 “1조 1천억 달러를 투입해 세계 경제에서 신용, 성장률, 일자리를 모두 살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G20 정상들이 합의한 것에는 1조 달러 약속 외에도 국제 금융 시스템 개혁, 헤지펀드에 대한 추가 통제와 회계 기준 강화, 신용평가 기관 규제 강화, 규제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조세피난처를 ‘폭로하고 망신주는’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것이 새롭게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부유국 모임인 OECD와 세계은행은 이미 조세피난처 규제를 시작했다.

케이먼군도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세피난처 규제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난한다해서 경제 위기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회담 과정에서 정상들은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저탄소 녹색 투자’ 같은 애매한 약속들을 포기했다.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엄청난 규모의 악성 부채를 공동으로 처리하는데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현실은 사뭇 다르다.

영국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악성 부채를 사들였지만, 다른 정상들은

G20 합의문에 숨겨진 내용은 이렇다. 앞으로 경제가 붕괴하는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IMF가 개입해 돈을 빌려 줄 것이다.

그러면 IMF는 신자유주의 조치를 확대할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불안정으로 곤경에 처한 미국의 계획

미국 정부가 이라크 주둔 병력을 줄이려는 시점에서 이라크를 ‘안정’시켜 온 핵심 전략이 무너지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이라크 정부 내 미국 동맹자들이 이른바 ‘각성위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각성위원회’는 붕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미국 쪽으로 넘어간 옛 저항세력들인데, 그 규모가 9만여 명에 달한다.

이 민병대는 ‘이라크의 아들들’로 불리는데, 그들은 미군이 수니파 무슬림 지역에서 물러나는 조건으로 다른 저항세력 분파에게 총구를 돌렸다.

이 덕분에 이라크 서부와 바그다드 일부 지역에서 저항세력 활동이 사라졌다. 이런 거래를 거부한 저항세력들



3월 28일 영국 런던에서 벌어진 G20 항의시위 사진 제공 Guy Smallman
3만 5천 명의 시위대는 일자리, 정의, 기후 안정, 전쟁 반대 등을 요구했다.

이런 조치를 내키지 않아 한다.

이른바 ‘1조 달러 패키지’도 막상 무경을 열어보면 겉보기와 다르다. 이미 출연한 펀드와 출연금 약속을 제외한 실제 액수는 1천억 달러밖에 안된다.

주류 언론의 평가와 달리 이것은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아니다. 정상들은 경기부양책의 용도에 합의하지 못했다. 실제로 합의된 내용은 장차 국가 부도에 직면한 나라가 나타날 때 IMF가 돈을 빌려 준다는 것이다.

최근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례가 보여 주듯이, IMF에서 돈을 빌린 대가는 혹독하다.

IMF는 돈을 빌려 주는 조건으로 해당 정부가 강력한 ‘긴축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다. 빈국의 민중은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 잘 알고 있다.

임금 삭감과 공공서비스 축소는 기본이다. 그래서 헝가리 정부는 IMF 협정의 대가로 7퍼센트 임금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G20 합의문에 숨겨진 내용은 이렇다. 앞으로 경제가 붕괴하는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IMF가 개입해 돈을 빌려 줄 것이다. 그러면 IMF는 신자유주의 조치를 확대할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를 구할 수 없다. 오히려 기업주들이 만든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가 치르도록 하려는 또 하나의 시도일 뿐이다.

출처 영국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김용욱 기자

합 — 가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각성위원회 성원들을 이라크 보안군으로 고용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이 약속을 어기고 각성위원회의 핵심 간부들을 공격하고 죽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3월 말 이라크 보안군이 바그다드 파드힐의 각성위원회 지도자를 체포하자 잠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각성위원회의 불만이 커지면서 미군과 시아파 거주지민들을 노린 도로 폭탄 매설 공격이 늘어나고 있다.

사이먼 아사프 영국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기자 번역 김용욱 기자

※ 카이로 국제회의의 조직위가 본지를 비롯해 회의 참가 신청자들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 26~29일 열릴 예정이던 카이로 국제회의를 5월 14~17일로 연기하게 됐음을 알려” 왔습니다. 그래서 본지 2호에 보도할 예정이었던 제7차 카이로 국제회의의 소식은 회의 일정 변경으로 신지 못했습니다.

고장난 자본주의 ①

규제 강화로 위기를 막을 수 있는가?



이번 호부터 ‘고장난 자본주의’를 연재한다. 영국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에 연재중인 이 시리즈는 맑스주의 경제 이론이 오늘날 경제 위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잘 보여 준다.

얼마 전 영국 중앙은행장은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규제 조치들이 “이번 위기를 낳은 위험의 누적을 막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은행 규제와 ‘경기부양책’은 경제 위기 심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

세계 지도자들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있다. 최근에는 G20을 즈음해서 시장 규제 강화를 내놓았다.

이것은 그럴듯해 보인다. 결국, 금융 시장과 경제의 전반적 탈규제가 이번 위기의 원인이라면 말이다. 미국 모기지 시장의 탈규제로 대출업체들이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 대출 사업, 다시 말해서 ‘서브프라임’ 사업을 벌일 수 있었다. 그 사람들이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과 새로운 시장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악성 부채를 확산시킨 것이 결합해서 ‘신용경색’과 현 위기가 시작됐다. 그렇다면, 규제만 강력했다면 이번 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

서브프라임 시장의 몰락이 경제 위기의 시작인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의 배경에는 자본주의 자체의 근본적 문제가 있다. 실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이윤율 하락 경향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한 것이었다. 이윤율 하락 경향 때문에 기업주들은 투자에 대한 수익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주들은 끊임없이 수익을 올리고 비용을 줄일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지출되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 하지만, 여기에 뜻이 있다.

한편으로, 개별 기업주들은 최대한의 이윤을 얻으려고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가능한 돈을 적게 주려고 한다. 그러나 만약 노동자들이 쓸 돈이 얼마 없다면, 기업의 생산품 중 팔리지 않는 것이 늘어날 것이고 이윤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빚과 신용 대출은 이 모순에 대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노동자들이 돈을 쉽게 빌리면 물건을 더 살 것이지만, 기업주들은 임금을 높일 필요가 없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윈-윈’ 전략이었다. 문제는 그 노동자들이 빚을 갚을 수 없을 때다.

따라서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 작동 방식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끝없는 위기를 겪지는 않는다.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 왔다.

규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생산돼서 문제

많은 이는 규제 강화가 경기 회복을 돕거나, 최소한 미래의 위기를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한다. 그러나 이미 많은 규제가 존재하지만 기업주들은 최대한 피하려 한다. 예컨대 내부자 거래를 보자. 어떤 회사의 ‘내부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어떤 이가 나쁜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청산하면서 패닉 상황이 연출되는 등 급격한 주식 시장의 변동을 막으려는 조치다.

그러나 내부자 거래는 흔한 일이다. 미국에서 1백72건의 인수합병을 조사한 한 연구를 보면, 모든 경우에 내부자 거래가 있었다.

기업주들은 종종 규제를 준수한다. 그러나 1980년대처럼 그런 규제 장치를 부숴야 할 때 — ‘레드 테이프 끊기’라

고 불린다 — 가 오면 정부들은 보통 기업주들의 의견을 따른다.

지금 어떤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가? 예컨대 영국 금융감독청의 로드 터너는 정부가 금융 시스템에 부과할 조치들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경기 팽창 때 은행이 자본금을 확대해 그 뒤 올 불황 때 사용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이것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지금 은행들이 대출하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환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설사 은행들이 대출해 주고 싶더라도 기업들은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또, 터너는 은행 유동성 확보를 돕는 조치들을 언급한다. 그러나 그런 조치들 중 이윤율 하락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제가 이미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음을 고려한 것들은 없다.

영국에서 자동차 산업은 큰 문제에 직면했다. 규제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차가 생산됐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인 경쟁 때문에 기업들이 너도나도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고 하면서 과잉생산이 발생한다. 개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최대한의 수요를 확보하려 자동차를 마구 생산하면서 차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다.

이윤이 줄어들고 있다면, 기업은 배당금을 줄일 것이고 주가도 떨어질 것

이윤 외에 다른 요인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젠가 터질 거품일 뿐

위기가 닥치자, 자동차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크게 줄거나 해고됐다. 이것은 연관된 산업에 고용된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차의 부품이 되는 철강이나 고무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도 그런 부품을 배달하는 노동자들이 그랬다.

해고 노동자 수가 늘면서 팔리지 않는 상품도 늘었다. 기업주들은 판매처가 줄자 생산을 더 줄였다. 그 결과 해고자가 더 늘고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초강력 규제를 도입해도 이런 과잉생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금융 시스템은 자본주의 작동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 기업주들은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이윤을 투자하고 수익을 확보할 출구를 발견한다.

그러나 금융 시장의 건강은 실물경제의 건강에 달려 있다. 주식 가치는 과장되거나 투자자와 투기꾼들의 활동에 따라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의 실질 가치는 기업 배당금 — 이윤 중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 — 에 달려 있다. 기업 배당금은 이윤에 달려 있다.

만약 이윤이 줄어들고 있다면, 기업은 배당금을 줄일 것이고 주가도 떨어질 것이다. 이윤 외에 다른 요인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젠가 터질 거품일 뿐이다. 금융 부문의 문제는 경제의 전반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규제 강화는 초점을 잘못 맞춘 것이다.

세이디 로빈슨 영국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기자 번역 김용욱 기자

경제 위기, 불확실한 삶 그리고 투쟁

‘88만원 세대’ **청년실업자**들이 말한다

“기업과 정부나 고통분담하세요!”

일자리가 최근 두 달 연속 10만 개 이상 줄었다(통계청, 지난해 동월 대비).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공식 실업자에 추가취업희망자, 취업준비자, “그냥 쉬” 사람을 더하면 실질실업률은 13.1퍼센트가 된다. 일자리가 감소한 압도적인 이유는 신규채용 감소다. 그래서 20대 ‘청년백수’ 비율은 21년 만에 최대치다.

청년들은 놀고 먹지 않았다. 비싼 등록금 내기 위해 알바 뛰고, 20대의 낭만 따위는 뒤로 제쳐 두고 ‘스펙’을 쌓기 위해 토익 공부, 고시 공부, 면접스터디, 학점관리, 인턴, 자격증 따기를 하며 달려온 결과다. 그런데. 경제 위기의 고통이 청년들에게 오히려 전가돼 20대의 꿈은 꽃피기도 전에 좌절하고 있다.

취업이라는 여두운 터널에서 방향하다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직업 교육원을 찾은 이 시대 청년실업자들을 만나 봤다. 이명박의 ‘일방통행’에 분통을 터뜨리며 촛불시위에 나서기도 했던 이 촛불 청년들은 좌절감도 토로했지만, 경제 위기의 책임을 청년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와 기업주들을 분명한 목소리로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지방대 법대를 졸업한 송상훈(가명) 씨는 2년이나 휴학하고 고시 공부에 전념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결국 남들처럼 취업 전선에 나섰다. 처음에는 대기업 법무팀에 지원했지만 학벌의 벽에 부딪

혔고, 점점 더 목표를 낮춰 연봉이 1천5백만 원밖에 안되는 법률사무소에도 취직해보려 했지만 그곳은 더 어린 전문대생을 차지했다.

한유철(가명) 씨는 좋은 직장을 구하려

고 다니던 대학을 그만 두고 새롭게 편입까지 했다. 하지만 1백50군데나 원서를 써 봐도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다.

취직 시험에서 떨어진 당시 심정을 말할 때 송 씨의 목소리가 떨려온다. “면접 한번 제대로 못 봤어요. 서류에서 다 잘리고 … 처음에는 사회 맞을 많이 하다가도 계속 반복되다보면 자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견딜수가 없어요. “나는 왜 안될까?” 나 자신한테 화가 나고.”

한 씨도 상처가 아프기는 마찬가지다. “월급 1백만 원~1백50만 원 받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나라라면 아무 상관없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물가도 엄청나게 비싸고, 그리고 일단 한 군데서 일을 시작하고 나면 만 코스로 바꾸기도 어렵잖아요. 자기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니까 없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게다가 송 씨는 이미 눈높이를 낮출 대

로 낮췄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최소한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

송 씨는 “그래도 지금은 아침에 나와서 뭔가 출근할 데가 있어서 좋다”고 한다.

눈높이를 낮춰라?

“착찰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다시 밑에서 시작해야 되는구나. 나름으로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 왔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송 씨는 “그래도 지금은 아침에 나와서 뭔가 출근할 데가 있어서 좋다”고 한다.

“착찰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다시

밑에서 시작해야 되는구나. 나름으로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 왔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송 씨는 “그래도 지금은 아침에 나와서 뭔가 출근할 데가 있어서 좋다”고 한다.

“착찰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다시 밑에서 시작해야 되는구나. 나름으로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 왔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송 씨는 “그래도 지금은 아침에 나와서 뭔가 출근할 데가 있어서 좋다”고 한다.

“착찰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다시 밑에서 시작해야 되는구나. 나름으로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 왔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송 씨는 “그래도 지금은 아침에 나와서 뭔가 출근할 데가 있어서 좋다”고 한다.

“착찰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다시

욕망이 엄청나다는 걸 느꼈어요. 기업 일원진들은 연봉 꽤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건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우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잡 세어줬도 마찬가지로요. 박봉에다가 맨날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임금을 삭감하고 직장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반면 대기업 상층 임원들의 [양보] 움직임은 거의 없잖아요. 진짜 많이 받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 두고 밑의 직원들 월급 잘라서 일자리 나누자, 진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자들에게는 중세바 꿇아 주고, [서민 세금으로 은행] 부실 매워 주는 데 쓰고, 반면 우리는 청년실업자 신세로 돌아서고.”

이명박 정권은 구제불능

이들은 전용 헬기 구입에는 수백억 원을 쓰면서 제대로 된 청년실업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이

명박 정부와 부자들에게 ‘진정할’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기업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지원하는 정부도 문제고요. 자기를 이익만 생각하잖아요. 기업들이 자기 이익을 어느 정도 포기하게 만들면서 청년실업자들 채용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씨는 일갈한다. “그 사람들 둔, 다 자기가 번 거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인데.”

단지 청년실업 문제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도 쏟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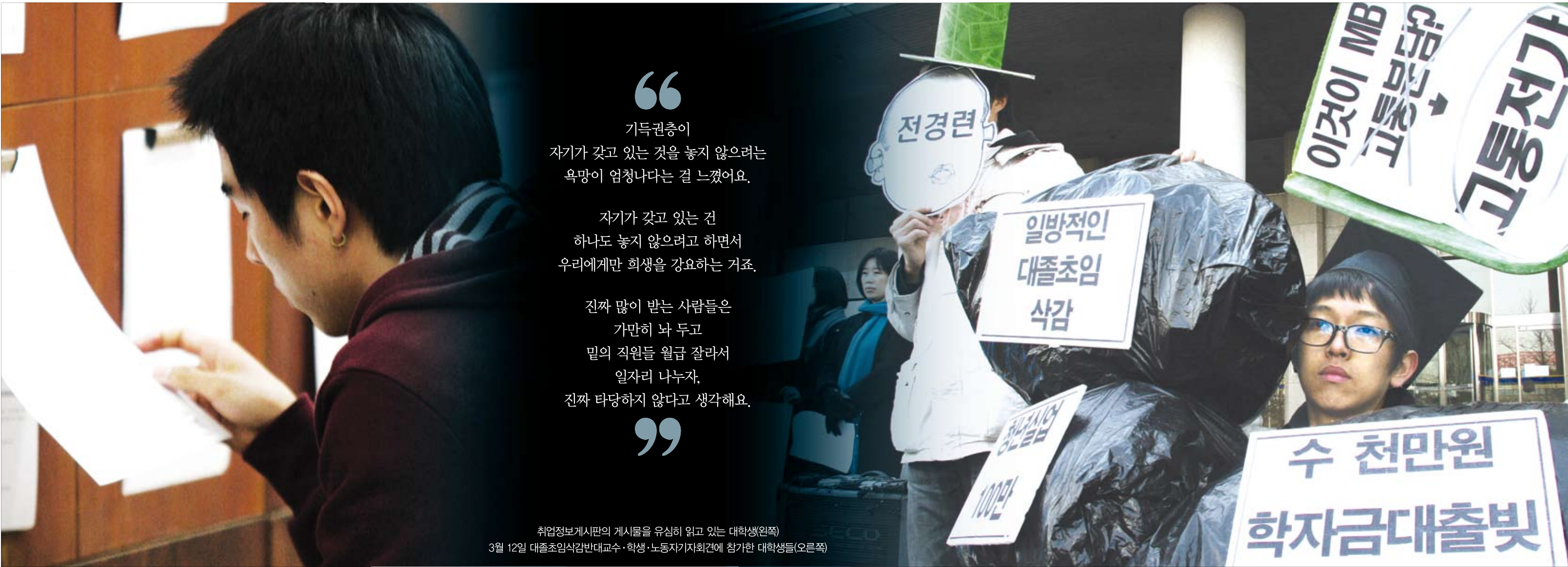
송 씨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할 때는 목소리가 격앙됐다. “이명박이 옛날에 기업가였지만, 지금은 국가의 지도자잖아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가 이뤄지는 건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면 무시하고 자르잖아요. 단지 공무원

결린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협상해 와서 ‘이제는 수 입한다. 끝이다. 먹어라’ 그런 식 아니에요?”

한 씨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를 지적했다. “[요즘] 강력범죄가 많아진다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행위를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계층이 분리되고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신원철 대법관 파문을 보고] ‘이명박 정권, 정말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게 됐어요. ‘폭군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법부의 독립뿐’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법부의 상징인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명박의] 마수가 어디까지 뻗어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구요.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민지 기자 | lionlady@k21.com



청년실업, 정부와 기업주가 책임져야

양질 일자리 1백만 개 25조 원 소요, 부자감세액은 90조 원

이명박 정부와 기업주들은 청년실업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들이 해결해야 할 책임이고 내놓은 잡세처럼, 대졸초임 삭감, 청년인턴제 등은 기껏해야 단기·저질 일자리를 양산하거나 이미 고통을 줄여주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나누라는 것 밖에 안된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1년 간 ‘일자리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책정한 예산의 90퍼센트가 대기업과 건설사 지원이었다. 직접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예산은 기껏해야 8.5퍼센트 밖에 안 된다.(경실련 조사) 그나마 건설공사가 늘어나도 저임금 일용직 일자리만 날을 뽐인다. 게다가 ‘기업을 지원하면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말과 달

리 기업 투자는 오히려 줄고 있다.

실업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수요가 줄어 위기가 더 심해질 것이 뻔한데도 이들은 이윤에만 목숨을 걸고 있다. 따라서 이윤 우선 논리를 거스르지 않고서는 실업을 해결할 수 없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학생 단체 들은 이명박과는 정반대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건설사 배만 불릴 게 아니라, 노동자·서민에게 정말 필요한 사회서비스(노인요양, 보육, 교육, 복지서비스, 환경보전 등)에 투자하면 양질 일자리 1백만 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데 4년 간 최소 25조 원 가량이 필요하다. 재원은?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 중 7퍼센트만 투입해도, 4년 간 부자감세액 90조

원의 일부만 투자해도, 대운하에 쏟아 부을 15조 원만 돌려도 마련할 수 있다. 재벌들의 배당 수익금도 엄청나다. 청년실업자들이 실업 공포에 떨고 있던 지난해 말, 재벌 11명은 엄청난 배당금을 챙겼다.(정몽준 4백10억, 정몽구 2백71억, 이진희 1백48억) 이와 더불어 청년실업자들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명박식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도입돼야 한다. 학생단체들과 민주노총이 5월 1일, 등록금 고통과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공동 행동을 나선다. 이런 움직임에 더 많은 노동자와 학생 들이 가세해야 한다.

최민지 기자 | lionlady@k21.com



4월 4일 국제공동반전행동에서 공연한 ‘잡리스’ 보컬 김우섭 씨

사진 이윤선

‘노래하는 미네르바’ ‘잡리스’ 인터뷰

‘가카’가 만든 실업자 가수 ‘잡리스’를 만나다

“내 나이는 서른하고 네 살, 왜 아직도 용돈 타쓰나 / 그건 내가 실업자기 때문 어쩌자고 구해줘 임영박 / 3백만 개 일자리 만든드세요” “우리 반 반장 임영박/울 학교 신문부 땀에 반장이 되었죠/BBK 치킨이 지 깨라고 자랑하다가/치킨집이 망하니까 다른 데 거라던/땀이 심한 영박/너 땀에 전학하고 싶다/거짓말했다며 학생부에 올려라 친구/책상 뺏지 말라 하다 맞아 죽은 친구/나는 알아요/임영박 친구 강부자 교수영 위해 그랬다는 걸” 요즘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잡리스’의 노래 ‘내 나이 서른하고 네살’과 ‘우리반 반장 임영박’이다. 해학적인 노랫말로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부패, 언론 장악, 용산 참사, 실업 무대책을 비판한다.

4월 4일 국제공동반전행동 사전 행사에서 공연한 ‘잡리스’를 만나 인터뷰했다. 보컬 김우섭 씨는 “노래 제작자가 ‘가카’라고 한다. ‘팀 이름이 실업자인데, 그 실업을 만든 책임자가 누구겠어요? 결국은 ‘가카’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카’가 제작하신 것이나 다름없죠.” 김 씨는 “지금 대한민국은 실업대란과 공안정국 이렇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인턴이나 일용직 같은 이런 싸구려 일자리 만드는 데 몰두하고 계신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는 대한민국 미래의 일자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동시다발로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양도 중요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잡리스”가 자신들을 ‘노래하는 미네르바’라고 소개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 “미네르바는 특별한 이야기를 해서 잡합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 한 건데도 잡합한 거 아닙니까? 저희도 미네르바같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인터뷰에 끝 났다고 잡이가고 공중파 방송 PD도 잡이가는 세상에 공개적으로 이런 노래를 하는 게 부당되진 않았냐고 묻자 “이런 것까지 잡아가면 정말 촌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하고 재치 있게 답했다. “잡리스”는 곧 후속곡을 발표한다고 한다. 숨막힐 듯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번에는 또 어떤 노래로 사람들의 숨통을 틔어 줄지 기대해 본다.

이현주 기자 | hyunj43@k21.com

왜 노동자·학생의 연대 투쟁이 중요한가

오늘날 대학생들은 고액의 등록금과 청년실업이라는 ‘이중의 굴레’ 속에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일까?

사실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는 등록금 때문에 울상짓는 것은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든 대학생들만이 아니다. 자식 하나 대학에 보냈으니 이제 한시를 닳았고 생각한 부모들에게도 ‘등록금 1천만 원 시대’는 피하고 싶은 고달픈 현실이다.

지난 30년 동안 대학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늘어면서 대학생 수가 10급절 넘게 급증했고, 늘어난 대학생의 압도 다수는 노동자 가정 출신이었다. 이것은 대학 등록금 문제가 단지 대학생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인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청년실업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청년실업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경직성 탓이라고 비난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의 경험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도 기업은 신규채용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시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한 결과는 오늘날 비정규직이 정제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끔찍한 현실이다. 이번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 인턴을 늘리겠다는 게 저들의 대안이다.

정부와 기업주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실업자들을 이간질시켜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뿐이다. 따라서 “40대와 50대 남자가 주축이 된 한국 경제의 주도 세력이 10대를 인질로 잡고 20대를 착취[한다]”(<88만 원 세대>), 우석훈·박광림은 규정은 이간질에 취약할 수 있고, 현실과도 맞지 않다.

오늘날 상당수 대학생들의 이해관계는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공통점이 많다. 이것은 대학생과 노동자 들이 정부와 기업주들에 맞서 연대 투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거보다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최근 역사에서도 학생과 노동자 들의 투쟁이 서로 강화하며 전진한 고무적인 사례가 많다.

연대의 경험

2006년 프랑스 정부는 교의 빈민가에 사는 아랍계·아프리카계 이주자들의 고용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CPE(26세 미만의 청년 노동자들을 수습기간 2년 동안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든 법)를 도입하려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자신들의 특권을 고수하는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시도를 비롯듯 교의 빈민가의 적지 않은 청년들이 거리에 나와 학생들과 함께 정부에 맞서 싸웠다. 학생들은 고등학교·대학교를 점거했고 노동자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학생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가 주춤거릴 때, 투쟁에 마침표를 찍은 것은 노동자들이었다. 정부는 시간을 끌며 투쟁의 열기가 식기를 기다렸지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서 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3월 28일 파업한 노동자와 동맹휴업한 학생 3백만 명이 시위를 벌이며 투쟁이 오히려 확대될 기미를 보이자, 정부는 결국 CPE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1987년 항쟁도 학생과 노동자 들의 대중 투쟁이 폭발적으로 분출해 승리한 사례다.

전두환 독재정권의 폭압 통치에 신음하던 사람들은 1987년 1월 박종철군 고문 치사 사건과 4·13 호헌조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반정부 투쟁에 나섰다. 초기에 이 운동을 이끈 것은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투쟁이 갈수록 발전하여 6월 중순순 시위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집회 참가자의 상당수가 노동자들이었다.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작업 현장에서 투쟁을 벌였고 그것은 7·8·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졌다.

사실 정부는 6·29 선언이라는 양보를 한 뒤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노동자들이 대중파업으로 쉼기를 박자 감히 반격에 나설 수 없었다.

역사가 거듭 보여 준 것은 이윤 체제의 심장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에 핵심적 구실을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폭발적 투쟁은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고무해 노동자 투쟁의 방아쇠 구실을 했다. 이런 노화연대의 전통은 오늘날에도 이어져야 한다. 고무적이게도 최근 이명박 정부와 기업주들의 대졸초임 삭감에 반대해 학생 단체와 노동 단체가 한목소리를 냈고, 5월 1일 노동절 집회도 공동으로 열 계획이다. 이런 연대 투쟁이 더 확대된다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동시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과 청년실업 문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조영문 기자 | jorinh@k21.com

노동

민주노총 임성규 지도부의 과제

진정한 ‘사회연대노총’ 이 되려면 투쟁을 통한 연대를 건설해야

이명박 정부는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유권해석까지 추진하면서 민주노총 패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면 민주노총을 무력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소리 소문 없이 미조직(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을 잘라내던 기업주들은 이제 위니아만도, 대우버스, 파카한일유압, GM대우 등에서 노조로 조직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20~30퍼센트씩 깎인지 오래다. 나아가 4월 8일 쌍용차는 2천646명 대량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선출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연대노총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과연 비정규직·여성·장애인 등 수많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진정 어린 사업과 투쟁을 벌여 왔는지 성찰해 봐야 한다”며 “국민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와 기업주들이 비정규직·여성·이주노동자 등 취약한 부분부터 시작해 전체 노동자를 향해 공격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옳은 방향으로 보인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노동운동 일부에서는 ‘사회연대’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 있다. ‘조직 노동자들은 노동자간 격차를 더 벌리는 임금 인상 투쟁 등을 하기보다 더 열악한 노동자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것은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밥그릇 지키기’라고 매도해 미조직 노동자들과 이간질하며 기업주에 대한 양보를 강요하는 것에 무기력한 주장이다.

2007년에 민주노동당 일각에서도 ‘양보와 나눔을 통한 사회연대’ 주장이 제



4월 3일 모터쇼장에서 대량해고를 규탄하다 끌려가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회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사진 제공 참세상

“국민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투쟁하겠다”

“

기대 열띤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이런 주장은 임성규 위원장이 속한 ‘중앙파’ 쪽에서 나왔다. 논쟁은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도 이어졌고, 현장 노동자들의 반발과 좌파의 비판 속에 이런 주장은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얼마 전에도 진보신당 심상정

전 공동대표는 “정규직 임금 인상 투쟁은 … 이익 집단으로서의 역할은 되지만,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은 아니다”(〈프레시안〉 2월 18일치) 하고 말했다.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할 때도 “민주노총의 임금 협상 투쟁에 대해 박수치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밤낮없이 뺨 빠지게 일하며 기업주들에게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 준 조직 노동자들이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임금이 가장 높다는 현대차에서도 2001~2007년 동안 전체 소득에서 노동자 몫의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이 64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떨어졌다.

정치 파업

더구나 조직 노동자의 임금 인상은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도 끌어올린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최근 현대중공업노조의 임금 동결 선언으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힘들어졌다.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지난 몇 년간 비정규직을 위해 정규직 임금 인상분 일부를 양보한다는 전략을 택했는데, 그 결과 산별 파업은 사라지고 임금 인상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반면 강남성모병원에서 비정규직을 해고했을 때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제대로 연대하지 않았다.

반면 비정규직 대량해고로 이어질 전환배치를 GM대우차지부 지도부가 합의하자 사측은 이에 힘을 얻어 정규직 임금 10퍼센트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지도자와 활동가들은 정당한 몫을 위한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건설하면서, 그것을 더 열악한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투쟁으로, 복지 확대를

민주노총이 위기에 빠진 중요한 이유는 “현실성 없는 투쟁 노선”과 “끝없는 정치 투쟁” 때문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제대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한 대정부 투쟁으로 연결·발전시켜야 한다.

곳곳에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비정규직법 개약까지 하는데 침묵하고 제대로 싸우지 않는 ‘사회연대노총’이란 있을 수 없다.

그 점에서 임성규 지도부가 학생·사회단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과 함께 위력적인 메이데이 건설에 나서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권역별 집중이 아닌 전국 집중 집회면 더 좋겠지만 말이다.

나아가 임성규 지도부는 MB약법과 민주주의 파괴 등에 맞서 전국적인 파업을 건설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위기에 빠진 중요한 이유는 〈중앙일보〉의 지적처럼 “끝없는 정치 투쟁” 때문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제대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촛불 파업을 벌인 화물연대는 국민적 지지를 받은 반면, 이명박의 낙하산 사장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KBS노조는 국민적 왕따가 된 것을 보라.

따라서 ‘사회적 교섭’을 추구하다가 투쟁의 기회를 놓치면 전 지도부의 오류를 반복해선 안 된다.

“민주노총은 투쟁은 잘 안 하는 것 같다. 교섭만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 교섭이 힘을 받으려면 투쟁도 필요한데 투쟁력이 별로 없다”(〈프레시안〉 2월 24일치)는 코스콤비정규지부 정인열 부지부장의 따끔한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전지윤 ratm71@left21.com

YTN노조 투쟁의 성과와 아쉬움

YTN노조는 4월 2일 노사 합의를 통해 10일 간의 파업을 끝냈다. 사측은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했고, 파업 직전에 구속된 노종면 위원장은 석방됐다. 그 대가로 노조는 “사장과 임직원들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종료” 등을 양보했다.

YTN노조의 투쟁에 고무받았고 지지를 보내 온 많은 사람들은 이 결과를 아쉬워하고 실망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YTN노조의 투쟁이 지난 2백60일간 만들어낸 성과 속에서 이번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지난해 촛불 항쟁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급진화와 투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었다. YTN 조합원들도 그 일부였다. 촛불의 저항에 밀리던 이명박 정부는 ‘비판 언론 잠재우기’에 나섰고 KBS, YTN 등에 낙하산 사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촛불의 열기를 이어받은 YTN노조는 낙하산 사장을 거부하고 투쟁에 나섰다.

그래서 YTN노조의 투쟁은 처음부터 단순한 노사 분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에 맞서는 정치적 투쟁이었

다. 정부는 경찰·검찰·법원·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동원해 범정부적 탄압을 가했다. 구본홍은 “6명 해직, 6명 정직, 8명 감봉, 13명 경고”라는 징계 칼날을 휘둘렀고 방통위원장 최시중은 YTN에 재승인(방송사업 허가) 취소 압력을 넣었다.

그런데 투쟁 경험도 거의 없는 YTN노조는 놀랍게도 흔들리지 않고 싸웠다. 끈질긴 투쟁은 정부의 언론 장악 의도를 압초에 부딪히게 만들며 정치적 타격을 가했다. 이에 자극받고 고무받은 언론 노동자들이 지난 연말과 연초에 언론약법 저지 파업에 나섰던 것이다. 따라서 “YTN의 투쟁은 한국의 언론 역사에 오래오래 빛나게 될 것”이라는 언론노조의 평가는 빈말이 아니다.

역사적인 투쟁

연말과 연초에 연달아 언론약법 등 MB약법 처리에 실패한 이명박 정부는 3월 중순부터 다시 개약 추진을 위한 정지 작업을 나섰다. 이명박 정부는 박연차 리스트를 통해 반이명박 진영 중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기를 꺾으려했고 무엇보다

MB약법 저지 투쟁의 선봉이었던 언론노조를 공격했다.

노종면 위원장 연행은 이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어서 〈PD수첩〉이준근 PD가 연행됐다. 그러나 언론인 강제 연행은 강력한 반발을 낳았다. 항의 성명과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언론노조는 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냈다. ‘부당한 언론 탄압’이라는 여론이 70퍼센트가 넘었고 〈조선일보〉도 ‘PD수첩을 순교자로 만들어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결국 정부가 이준근 PD를 곧 풀어 주면서 정부와 언론노조의 날카로운 대치 국면은 일단 풀렸다. 이때 정부와 사측은 노종면 위원장을 볼모 삼아 YTN노조를 압박했다. 방송사업 조건부 재승인을 취소하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YTN노조는 노종면 석방과 구본홍 반대를 내걸고 파업을 지속하고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은 강력한 연대를 제공하는 게 필요했다. 상황은 불리하지 않았다. 파업 참가율은 90퍼센트가 넘었고 여론은 노동자들의 편이었다.

하지만 YTN노조 지도부는 위원장 구

구본홍은 2백60일 만에 YTN 낙하산 사장에 착륙했다. 그러나 그는 만신창이가 됐고 YTN노동자들은 단련된 투사가 됐다.



2008년 12월 11일 YTN지킴이로 나섰던 촛불 시인

YTN지킴이로 나섰던 촛불 시인

속과 지도력의 공백을 피하기 위한 양보를 택했다. 희생을 각오한 더 과감한 투쟁보다 조직 보존의 논리를 택하며 안타깝게도 투쟁에 족쇄를 거는 문구를 합의한 것이다.

물론 전방위적 탄압 속에서 홀로 싸우기가 벅했을 것이다. 그 점에서 언론노조 지도부도 ‘미디어발전국민위’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무려 2백60일 만에 겨우 YTN에 낙하산 사장을 착륙시켰다. 그러나 구본홍 사장은 이미 만신창이가 됐고 YTN노동자들은 단련된 투사가 돼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 YTN노조에 일부 족쇄를 채우긴 했지만 언론노조 전체의 조직력과 투쟁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4월 임시국회도 갖가지 암초로 덮혀 있고 언론약법과 MB약법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장차 벌어지게 될 언론약법 저지 투쟁에서 YTN노조가 이번의 아쉬움을 만회하길 바란다.

전지윤 ratm71@left21.com

논쟁

진보 진영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하는가?

최근 경제 위기의 격화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진보 진영 일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진보 진영 내에서도 논쟁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한국 진보 진영의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을 시작으로 <레프트21>은 앞으로도 진보 진영 내의 건설적인 토론과 논쟁을 활성화하는 기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주32시간제’와 ‘국가고용책임제’로 일자리 유지해야

임동수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올해 교섭 구안에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 세제 감면과 최소한 단축분에 해당되는 통상임금 삭감분 이상을 지원하도록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의 요구안으로 주35시간 노동제와 노동시간 상한제, 교대제 개선과 월급제로 임금체계 전환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32시간제’ 전면 도입과 ‘국가고용책임제’를 통한 일자리 유지를 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저성장·고실업 경제 구조와 공황에 맞서 현재의 일자리 규모를 유지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 양질의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주창하고 있지만, 4백만 실업자와 생산 감축, 자영업자 몰락으로 증가할 실업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정리해고에 처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할 방안이 더욱 절박하다.

둘째, 자본은 경제 공황의 손실을 일차적으로 해고를 통한 비용 감소로 유지하며, 2차로 전사회적 비용 증대(예컨대 공적자금 등을 통한 보전)로 극복해 왔다. 이런 손실 부담의 폭력적인 전가에 맞서

최소한의 방어권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이 부실한 경우, 체제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자리 유지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말고는 경제 공황 시기에 맞서 일자리를 유지할 방안이 없다. 자본주의에 내재된 모순의 필연적 귀결이기 때문이다.

셋째,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경제 공황 시기에 노동계급의 요구를 사회 전반에 내세우는 매우 심각한 이데올로기 투쟁이기도 하다. 그간의 노동운동은 시민권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 즉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구호는 우리 사회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던 침묵과 굴종의 노동자들에게도 정당한 시민권을 달라는 요구였다. 법에 따라 노조를 조직할 권리, 노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 등을 보장해 달라는 ‘청원’ 수준의 요구와 생존권이었다.

노동권을 전 사회적 최우선 요구로

이제는 ‘노동권’을 시민권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 사회적 최우선적 요구로 격상시켜 나가야 한다. 경제 공황의 책임을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자본에 맞서 경제 위기 극복과 생존권을 보장받으려는 전국민적 요구를 대표하는 것으로 노동계급의 노동시간 단축 요구가 적극화해야 한다.

사회보장이 부실한 경우, 체제 안전을 위해서라도 일자리 유지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말고는 경제 공황 시기에 맞서 일자리를 유지할 방안이 없다.

지난 시기 주40시간 노동제 요구는 대기업 위주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점차 하층 노동시장으로 왜곡돼 온 과정이었다. 주40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실노동시간 감소와 정규직 일자리 증가로 나타나지 못한 채, 중소기업에 노동자에게 모든 짐을 떠안기듯 진행됐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거꾸로 진행돼야 한다. 가장 첨예하게 실업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사장 위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유지가 선행되면서, 점차로 대기업으로 확대돼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중소기업사장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을 국가가 책임지며, 이에 따르는 사회적 참여와 감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공적자금

을 조성해 ‘고용대책’에 쏟아부어야 한다. 왜 공적자금을 은행과 대기업에만 퍼부어야 하는가?

한편, 노동시간 단축 요구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반대급부인 노동비용 하락과 하청 생산의 확대라는 자본의 대응으로 이어져 오히려 그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 비약이다. 왜냐하면, 노동시간 단축과는 별개로 IMF 이후 노동관리의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비용 감소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자본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금 인상 요구가 자본의 노동강도 증가로 상쇄한다고 해서 그 요구 자체가 잘못이거나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임금 인상 투쟁이 다양한 내용으로 발전하며 궁극적인 투쟁으로 발전하듯이, ‘노동시간 단축’ 투쟁 또한 현장의 요구에 기초한 풍부한 내용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벽에 봉착하듯이, 더 근원적인 노동계급의 정치투쟁으로 발전돼야 할 내용으로 봐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에 유효한가로 논쟁할 문제가 아니다. 경제 공황 시기 실업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다. 계급적 능력의 문제는 별개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함정

경제 위기와 일자리 나누기 — 해고금지특별법을 만들자!

한지원

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

최근 경제 위기로 일자리 나누기 방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금속노조는 올 초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했고, 여러 정부 연구 기관 역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하고 있다. 물론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금속노조는 교대제 개선, 월급제 실시 등을 통한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자본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반드시 임금삭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본의 입장은 사실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은 아니다. 자본은 줄어드는 노동비용을 노동자들이 원한다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끼리 나눠 가져 보라는 것이다. 노동자를 필요할 때 부리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자본의 속성이 뻔히 보인다.

한편, 금속노조를 비롯한 진보 진영이 주장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역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1998년 이후 진행된 광범위한 노동유연화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이 총 노동자 차원의 일자리 나누기보다는 저임금 하청노동자의 증가와 노동강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2004년부터 시작된 법정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 역시 이러한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몇 가지 데이터를 살펴보자. 제조업

광범위한 노동유연화로 인해

노동시간 단축이

총 노동자 차원의

일자리 나누기보다는

저임금 하청노동자의 증가와

노동강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들은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며 외주 하청 비율을 크게 늘렸는데, 그 결과 1992년 제조업에서 16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던 영업 총비용 중 인건비 비중은 1999년 이후 11퍼센트까지 하락했다. 자동차와 조선업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아예 제작을 외부에서 하는 모듈 생산 비중이 전체 생산 중 30퍼센트까지 증가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사내하도급인력이 직고용 노동자의 1백30퍼센트를 넘어섰다. 더욱 문제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2004년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됐다는 것이다.

즉 노동시간이 단축돼 직고용 노동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본은 직고용 노동자의 생산량 감소분을 외주 하청의

증가로 대체해 나갔다는 것이다. 제조업 대기업들의 인건비 비중은 노동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금 더 하락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증가가 아니라 위와 같은 일자리 이동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중소 제조업체와 대규모 제조업체의 상용직 증감 추이를 봐도 알 수 있다. 노동부 통계를 보면 2004년 이후 하청(용역) 생산을 담당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상용직 노동자는 늘어났지만 대기업 상용직 노동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요컨대, 생산과 노동의 외주화라는 노동조건은 노동시간 단축을 일자리 증가가 아니라 일자리 이동으로 만들었으며, 경제 위기 속에서 ‘사활을 건’ 생산 비용 감소를 계획하는 자본을 상대로 한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다시 한 번 저임금 중소기업장 노동자의 증가 또는 비정규직의 확대로 악용될 여지가 더욱 크다는 것이다.

긴 호흡으로 “해고금지특별법”을 제정하자

이미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재 핵심 문제는 해고다. 노동시간 단축 주장 역시 해고를 피해 보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현장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일할 수 있을 때 한 톨이라도 더 벌기 위해 물량 확보를 위한 노동자간 경쟁으로 뜨겁다.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 노사 교섭을 하고, 노동자간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노동자 운동은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자본이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GM대우, 만도 위니아, 한일파카 등에서 불거지고 있는 외국자본의 철수와 이로 인한 휴폐업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해고’ 그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최근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한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해고금지특별법’ 제정 운동을 논의하고 있다. 해고금지특별법은 첫째, 파산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노동조건 하락 없는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고, 둘째 외국인 소유 기업의 노동자 고용에 관한 특별 책임을 제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노동자 해고 시 외국인 자산을 통제하고, 해외 본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자본 유출을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들로 논의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존의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외주 하청노동자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논의되고 있다.

대중행동을 위한 요구들

경제 위기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불황의 골은 더 깊어가고 있다. 위기를 낳은 모순투성이인 체제 속에서 시달려온 노동자 서민들은 지금의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려고 안달이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일반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깎아 주려고 한다. 이 거꾸로 된 체제에서 간단한 해결책이 존재한다. 부자들에게 더많은 세금을 거두고 재벌들이 쌓아둔 수백조 원의 잉여금으로 서민들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제시하는 요구들은 바로 이처럼 저들의 우선순위를 뒤집으며 저항의 결집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요구들을 쟁취하려면 강력한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이윤보다 삶을 우선하는 이 요구들과 이를 위한 대중투쟁의 논리는 체제의 논리와 충돌한다. 따라서 이 요구들은 노동자 서민들의 현재 의식과 근본적 변혁을 위한 투쟁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구실을 할 수 있다. 세계 자본주의가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에 처해있고 전쟁이라는 아班的 그림자도 짙어지는 상황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활동가들은 전환적 요구를 제시하고 이런 요구들을 둘러싼 대중행동을 촉구해야 한다.

- 물가통제, 실질임금 삭감 반대
- 모든 형태의 해고 반대와 고용 안정
- 임금 등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35시간 노동제로 일자리 창출
- 청년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지급
- 부도기업의 국유화
- 비정규직 차별 폐지와 정규직화
-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
- 복지제도의 대폭 확대
- 부자들을 위한 교육 반대
- 부동산 규제와 공공주택 확대
-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 FTA 반대
-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및 재국유화
- 투기자본 규제
- 정치적·시민적 권리 보장
- 여성과 소수자 차별 반대
- 제국주의 전쟁 반대
- 한국 정부의 친제국주의와 군국주의 반대
-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

* 이 요구들을 제시하는 배경과 각 요구들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레프트21> 웹사이트(<http://www.left21.com/article/6304>)를 참고하십시오.

기획 연재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① — 장하준

국가가 시장의 광기를 치료할 수 있을까?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어떤 대안을 추구할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레프트21>은 진보진영에서 제기하는 경제 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안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연재를 시작한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사다리 건너치기》 등 장하준 교수의 책들은 신자유주의의 ‘유죄판결문’들로 가득하다. 그는 국가에 의존해 성장한 선진국들이 후진국 경제들에는 ‘자유무역’ 교리를 강요하는 위선을 폭로한다. IMF 등의 기구들은 후진국 경제에 필요한 조치들을 ‘건어차면서’ 이들 국가들의 장기적 성장 기반을 나빠지게 했다. 그는 멕시코 등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의 실상을 폭로하면서 한미 FTA와 한EU FTA 모두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부실 예측조차 어려운 파생상품을 금지하고, 외환시장을 급속한 자급이동에 취약하게 만드는 자본시장 자유화가 아니라 자본시장 통제 등의 ‘시장 규제’가 필요하다는 그의 정책 제안은 타당하다. 요컨대 신자유주의는 “경제 성장의 모든 전선 — 성장, 평등, 안정 — 에서 실패했다.” ‘시장’이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는 불완전한 제도라고 올바르게 지적하는 그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민 경제의 성공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국가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역할 모델’인 한국과 스웨덴은 모두 자원이나 넓은 내수시장 등을 갖고 있지 않은 후발 경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일 것이다. 그는 박정희 시기의 한국 경제에서, 적절한 산업정책을 세워 전략산업을 지도·육성하고, 무역·금융·국내시장 등을 규제하는 “국가의 역할”을 이끌어 낸다. 특히, 박정희 모델은 ‘수출주도전략’을 잘 발전시켰기 때문에 ‘예외적인’ 수준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력 있는’ 제조업 수출 강국 전략에는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다. 더 많은 국가들이 이런 전략을 채택할수록 세계시장에 쏟아지는 막대한 상품들을 흡수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무역흑자국과 무역적자국 사이의 엄청난 불균형”은 수렁에 빠진 세계경제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나머지 세계는 미국에 계속 수출만 하고 미국은 계속 수입만 한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빚잔치를 벌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계경제가 굴러갈 수 있겠느냐고 걱정한다. 물론, 작은 규모의 경제는 세계시장에서 수출시장을 찾기가 더 용이하고, 일시적으로 급속히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상황이 달라지면 고도성장의 배경이었던 급속한 축적은 바로 과잉설비와 부실이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고도성장과 1997년에 겪은 외환위기에 적용된다.

장하준은 또 스웨덴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장기적 성장 기반을 이끌어내는 “국가의 역할”에 주목한다.

스웨덴은 노동운동과 좌파가 국유화 요구를 폐기하고 재벌체제(발렌베리그룹)를 인정하는 대신,



재벌들이 쌓아둔 돈을 복지로 돌리려면 ‘대타협’이 아니라 대투쟁이 필요하다.

사진 제공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루스벨트의 뉴딜이든, 히틀러의 나치즘이든 간에 국가개입은 대공황을 낳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2차 대전과 막대한 군비지출을 통해서야 25년짜리 호황의 기초가 놓였다.

재벌은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국가는 복지를 책임지는 ‘대타협’을 통해 높은 제조업 생산성을 기반으로 복지와 성장 둘 다 가능했다는 것이다.

복지가 열악한 한국에서 서구의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훌륭한 주장이다. 그러나 장하준은 재벌과 국가에 ‘대타협’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에 대해 마땅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 그는 스웨덴의 복지나 루스벨트의 ‘뉴딜’은 1920년대와 30년대에 노동계급이 혁명적 투쟁을 동원해 자본가계급과 국가의 양보를 강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약점은 소액주주운동과 같이 재벌의 소유구조를 주로 문제 삼는 운동을 비판하며 ‘대타협’의 파트너인 재벌체제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는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그는 재벌체제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업조직 형식이자 한국 경제의 ‘자산’이라고 여긴다.

‘신자유주의’가 낳은 문제가 경제의 ‘금융화’에서 비롯한다고 보는 분석도 재벌에 대한 그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무분별한 세계화를 받아들이면서 ‘초국적 해외자본=금융자본’이 ‘국내재벌=산업자본’을 억압하게 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주주의 단기적 이해관계 때문에 은행은 기업에 장기투자할 돈을 빌려 주지 않고,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 고용이 정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투기자본의 폐해는 당연히 인정해야 할 점이지만, ‘악한’ 금융자본이 ‘선한’ 산업자본을 억압해 산업이 정체한다는 구도는 현실과 다르다.

대기업 투자의 정체는 산업자본의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의 고질병인 이윤율 하락 경향 때문에, 수익을 올릴 마땅한 투자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투자율이 다소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 투자가 방해받았다고 말할 수준은 아니다. 한국의 투자율은 최근 몇 년 동안에도 GDP 대비 30퍼센트에 근접해 OECD 국가들 중 1위를 기록했다.

대기업들은 막대한 공적자금과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를 갚아 금융비용을 낮추고 투자 수준을 조정하고 착취율을 높이는 등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고용의 질은 급속히 나빠져 노동소득분배율이 1996년 63.4퍼센트에서 2002년 58.2퍼센트로 감소했다. 이것은 ‘금융자본’과 똑같이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산업자본’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응이었다.

따라서 재벌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잉여금을 쌓아두고도 오히려 비정규직 확대 등 고용을 악화시키려는 재벌에 맞서 이들의 이윤을 일자리와 복지에 쓰라고 투쟁하는 것이 맞다.

장하준은 의식적인 국가 개입을 통해, ‘시장’은 완벽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배 엘리트들의 ‘선의’에 기대는 식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장기적 성장 기반을 갖춘 나름대로 규제되는 국민경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세계시장에서 개별 국민 경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것인 한, 시장 제도의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든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의 ‘사다리를 건너치’야 한다. 장하준은 “역사적으로 그걸 넘어섰던 시기도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장하준이 사다리를 건너치지 않은 예로 높이 사는 ‘마셜플랜’은 2차 대전이 낳은 잿더미 속에서, 미국 제국의 패권을 위해 세계를 분할한 냉전의 일환이었다.

국가가 나서 ‘시장 실패’를 바로잡으려던 대규모의 시도는 이미 1930년대와 1970년대에 거듭 실패했다. 루스벨트의 뉴딜이든, 히틀러의 나치즘이든 간에 국가개입은 대공황을 낳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축적 경쟁은 더 위험천만한 방식으로 내달렸다. 2차 대전이 낳은 아만적 파괴와 냉전의 산물인 막대한 군비지출을 통해서야 25년짜리 호황의 기초가 놓였다. 호황의 끝에서 케인스주의 정책이 대대적으로 시행됐지만 불황을 막지 못했고, ‘신자유주의’ 교리가 케인스주의를 밀어냈다.

자본주의 시장 체제의 본성인 이윤추구를 위한 경쟁과 축적 논리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대안만이 진정으로 ‘시장’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다.

이상우 객원기자

장하준
널리 알려진 비주류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며 신자유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해 왔다. 전공은 발전경제학으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발전 정치 경제학 강의를 하고 있다. 2002년 출판된 《사다리 건너치기》를 비롯해, 2007년에 출간된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영향력 있는 경제 저작들을 출판했다.





‘민주노총 혁신’, ‘실업과 이주노동자’,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짧은 독자 의견 모음 등 지면에 실리지 않은 여러 독자 편지 글들이 웹사이트에 실려 있습니다.

‘사형제’ 기사를 읽고 — 현행 법제도 자체에 근본적 한계 있어

사형제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이지 않으며 자본주의 체제처럼 법 권력이 지배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는 오용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최미진 동지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사형제 폐지는 분명히 중요한 진보적 성취일 것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사형제에 반대하더라도 기존 법 제도 안에서 이런저런 대안을 찾아 보려는 유혹을 느낍니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를 다루는 기사도 <레프트21>에서 다루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파슈카니스의 <법의 일반이론과 맑스주의>(신서원)를 읽고, 이에 대한 제 생각을 (형법에 한정해 쓰긴 했지만) 보내 봅니다.(이하 팽어체)

현행 법제도는 가해자 감화에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형벌체제 자체가 ‘죄를 누우치게 한다’가 아니라 ‘짓값을 치르게 한다’에 초점을 둔다.

자본주의 사회는 범죄마저 일종의 가치화 과정을 통해 ‘상품화’한다. 실제로 많은 죄를 ‘재산형’으로 ‘청산’할 수 있다. 그나마 ‘자유형’을 강제당하더라도 ‘보석금’으로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업가 같은 부자들에게는 벌금 따위가 전혀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돈이 없는 사람은 신체적 ‘자유’를 구속받는 대가로 짓값을 갚아간다.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교도소의 감화 과정도 대체로 종교인들의 자발적 봉사에 의지한다.

이런 방식은 효과적으로 재범을 막지 못한다. 효과가 있더라도 죄를 반성해서라기 보다 ‘경제적 불이익, 사회적 시선에 따른 위축감’ 효과가 큰 듯하다. (이러한 사회 부적응은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한다.) 죄를 누우치더라도 (특히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가난한) 대다수는 여전히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하는 상황에 던져진다.

현행 법제도는 피해자 보상에도 전혀 효과가 없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같

은 경우, 많은 사람이 존재 자체를 모르고, 조건 또한 까다롭다.

예컨대 “유족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보상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람만이 받을 가치가 있다는 식이다. 그나마 보상을 받더라도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의 정신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을 받는 일 등은 요원할 뿐이다.

이윤이 주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 사회와 조화될 수 있는 인격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라면 가해자가 죄를 누우치고 재범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한 상황에서 보호 조치를 종결할 것이다.

피해자에게도 사회적 차원에서 여러 보상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가 올 때만, 범죄로 인한 공포와 고통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whereslover

‘박연차 스캔들’ 기사에서 MB 비판 강화했어야

MB에 대한 비판을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박연차가 노무현 정권의 상징적 인물이긴 하다. 그러나 그의 로비대상이 노무현측 인사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했다는 점을 본다면, 검찰의 의도야 어쨌든 박연차 사건의 본질은 부패한 지배계급 전체에 대한 폭로이다. 특히 시기상 그 중 MB에 대한 폭로를 더 강하게 해야 했다. 대중의 정서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아닐까?

이승현

오바마의 한반도 정책은 전임자와 비슷할 것

[편집자] 지난 호 독자편지 ‘오바마의 대한민국 정책은 전임자의 것과 판이하게 다를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바마의 주변에 있는 클린턴 사람들이 주요 요직에 있던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한반도는 하마터면 전쟁에 휩쓸릴 뻔했다.

물론 필자의 말대로 미국 경제가 끊임없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반도에 신경을 쓸 여력이 예전보다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국면에서는 유화 제스처를 보일 수는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가 북한에 대해 산

정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종합선물세트를 곧 보여줄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전임자와 다름없이 미국과 오바마의 관심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있는 중동에 쏠려 있고 따라서 한반도 문제는 중동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이 될 수 있다. 결론은 오바마의 한반도 정책 역시 전임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제국주의와 아만에 맞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만이 궁극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철

범죄율 증가는 고실업과 저임금 때문

강호순 사건이 터지고 그 끔찍함에 분노한 대중을 이용해 이명박은 자신의 과실을 덮고 공권력을 강화해 사회를 더 경직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밝혀진 것만으로 해서 사형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대쪽으로 오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친구들이 범죄 대상이 되거나 그 범죄자가 주변과 연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진다. 덮어 놓고 ‘인권’이라는 주장으로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의도적으로 사형제를 이용하려는 부류를 제외한다면 찬성하는 쪽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범죄율이다.

어떤 것들이 정말 범죄율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보면, 실제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실업률과 저소득층의 임금수준이었다.

실업률이 높으면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많은 연구로 증명됐다. 실업률이 낮다고 해도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계층의 임금수준이 낮으면 그 또한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사형제가 아닌 실업자 대책과 저소득층 임금수준 향상을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해야 한다.

최병현

노동자들의 양보가 전술적 유연함인가

지난 호 ‘민주노총, 무엇을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가’ 기사에서 전원배 씨는 전술적으로 유연해야 한다며 임금 삭감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보를 통해 위기의 책임이 자본과 권력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투쟁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양보하면서까지 입증하지 않더라도 경제 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분명하다. 문제는 책임져야 할 자들이고 통분담 운운하며 그 책임을 죄 없는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이명박과 기업들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떡을 빼앗고서는 또다시 떡을 요구하는 옛날이야기의 호랑이처럼 노동자들에게 계속해서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호랑이보다 더 위선적이고 악랄한 자들에게 칼자루를 쥐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칼자루를 넘겨주고 투쟁 역량을 모으자는 것은 유연함이 아니라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다.

노동자들은 양보의 경험이 아니라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투쟁에 나설 수 있다.

지금의 현실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전원배 씨의 지적처럼 경제 위기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프랑스 노동자들은 강력한 투쟁으로 임금 대폭 인상, 유급 휴가, 임금 삭감 없는 주 40시간 노동 등을 쟁취했다. 미국에서도 실업구제제도를 비롯한 복지제도가 마련됐다.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한국의 노동자들도 투쟁을 통해서 수백조 원에 이르는 기업들의 공간을 열어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이승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잘못 짚은 문제입니다

<레프트21> 편집팀이 2호에 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이하 금산분리) 완화 반대 주장 기사(5면)를 실은 것에 이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이하 팽어체로 서술).

신자유주의와 침략 전쟁이라는 지배자들의 보편화된 공세에 힘겹게 저항하는 처지에선 주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을 구별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금산분리는 노동계급과 평범한 대중이 간절히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거니와, 그것을 통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근거도 없다.

자본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라면 딱히 금융자본을 문제거리로 보지 않을 것이다. 금융자본이 획득하는 이윤의 원천이 주로 산업자본의 이윤에 있고,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은 산업 이윤율의 감소 경향 때문이다. 경제 위기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서 찾지 않고 **자본의 특정 조직 형태**(가령 재벌이라는에서 찾은 것은 개혁주의자들의 고질적인 습관이다.

또한 현실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서로 긴밀히 결합돼 있다. 완전한 분리가 비현실적이라만큼 유착해 있다. 그래서 한국의 주요 재벌은 모두 금융회사들을 계열사로 포함하고 있고(가령 삼성그룹에 삼성생명이 속한 것처럼), 은행의 대주주도 실은 재벌그룹 계열의 산업 기업인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금산분리를 현실화하고자 개혁주의자들은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이다. IMF를 불러들인 1997년 금융공황 이래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포퓰리즘에 기대어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 개혁에 훨씬 못 미치는 종류의 재벌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 표피적인 ‘개혁’조차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오히려 지난 십여 년 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강화됐고, 재벌 총수의 제왕적 경영은 교묘히 은

폐돼 있을 뿐이다. 이것은 개혁주의자들이 집권해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진정한 권력이 재벌 총수들과 그 계열사 CEO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금산분리론은 이러한 이론적 문제도 문제지만, 정치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 금산분리를 역설하는 각종 개혁주의자들(가령 삼상정 전 의원)은 산업자본의 일부와 계급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동맹 대상으로 미화된다. 보통들 ‘중소기업’이라 할 때, 실제로는 대기업인데도 비(非)재벌 기업이면 모두 그 범주에 포함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문제점은 노동계급이 자기 착취자를 착취 형태에 따라 좋은 착취자와 나쁜 착취자로 나누어 보도록 고무된다는 것이다. 이는 계급의식을 좁히는 효과를 낸다.

특히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실제로 중소기업인 기업일지라도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과 윈·하청 관계를 맺고 있어, 노동계급의 투쟁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고, 또 그럴 수도 없다. 오히려 지불 능력 부족 때문에 중소기업이 노동자에게 더 못되게 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레프트21>에 기고한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 김문성 연구부장은 자본주의 체제와 전체 한국 경제 구조 속에서 금산분리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측면인 재벌과 은행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김 연구부장에 따르면 부패와 비리는 물론 심지어 경제 위기 심화도 재벌의 은행 소유 탓으로 돌려진다.

하지만 부패와 비리는 재벌과 은행의 관계에서 비롯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면서도 긴장이 있는, **국가와 자본**의 변증법적 관계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패는 모든 자본주의 나라에 편재하는 현상인 동시에 한국처럼 국가자본주의의 유산이 강력한 나라에서는 특

히 심각한 현상인 것이다.

재벌의 은행 소유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김 연구부장의 주장도 간단히 반박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여신제도의 발달이 자본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것은 1백 년도 더 전에 로자 룩셈부르크가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과 논쟁하면서 지적한 점이다. 하지만 룩셈부르크는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따위의 문제와 흡사하게 지엽달단적인 자본 편제 방식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재벌의 은행 소유 문제는 경제 위기 논의에서 매우 부차적인 문제다. 지금 세계 동시 불황에 휩쓸린 모든 주요 경제들에는 각각 서로 다른 그 나름의 금융제도가 있다. 이 수많은 변형체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묶을 수도 있다. 미국식, 일본식, 독일식, 중국식… 하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금융제도상의 이 특수 유형들이 왜 한결같이 심각한 금융 위기와 실물경제(산업) 위기에 빠졌는가? 왜 가장 선진적인 금융기법을 구사한다는 미국과 영국이 가장 심각한 금융 위기에 처해 있을까? 세계 최대 산업 기업들의 일부인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등이 은행 지배를 못 하도록 사후규제를 강력히 받았다 해서 부도 위기에 몰린 그들의 부실한 재무구조가 달라진 게 있는가?

이 모든 비판에도 나는 김 연구부장이 재벌의 은행 소유의 대안으로 주장한 은행 국유화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가 은행 국유화를 주장하기 위해 개혁주의자들의 금산분리론을 자신의 논거로 차용한 것은 부자연스럽다.

물론 은행이 국유화된다 해도 부패·비리와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은행 국유화는 2001년 아르헨티나 사태 같은 황당한 금융 패닉을 어느 정도 제어해 서민의 피해를 다소 줄이는 데는 일조할 것이다.

최일봉

우원석 영화칼럼

악의 진부함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리고 영화는 극장에서 간판을 내린 뒤 악(惡)을 남긴다.

영화를 본 뒤 관객들이 선한 주인공을 인상 깊게 기억하는 경우는 드물다. <양들의 침묵>(1991)을 본 관객들은 여주인공 클라리스보다 인육까지 즐기는 한니발을 더 선명히 기억한다. 또 <스타워즈>(1977)를 본 관객들은 루크보다 다스베이더를 더 자주 입에 올린다. 악당이 직접 나오지 않는 영화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영화들에서는 주인공이 처한 모순이나 딜레마가 드라마 기능상 악당 구실을 한다. 그래서 상황 모순과 딜레마, 즉 드라마 내면의 악이 창의적이고 매력적일수록 관객들은 큰 감동과 만족을 느끼게 된다.

영화 속의 악이 매력적이면 영화도 매력적이게 된다. 묘사되는 악의 완성도와 영화의 완성도가 서로 비례하는 셈이다. 기념비적인 영화에는 기념할 만한 악이 나오고 팝콘 무비(팝콘 먹으며 보는 시시한 영화)에는 시시결렁한 악이 나온다. 그렇기에 영화 창작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공적인 영화를 만드는 비결은 간단하다. 흥미로운 악을 인상 깊게 창조하면 된다. 이걸 누구나 할 수 있어 보인다. 우리 주변엔 모순과 악당이 넘치고 흐른다. 그런 현실의 악을 적당히 베끼기만 해도 될 것 같다.

김석기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영화 창작에서 악을 가공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정치이론가 한나 아렌트의 말대로 현실의 악은 진부함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독일계 유대인 한나 아렌트는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1960년 유대인 학살의 총책임자 오토 아돌프 아이히만이 잡혔을 때 —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아르헨티나에서 납치해 예루살렘으로 압송했다. — 아렌트는 흥분에 들떠 취재하러 재판정에 참석했다. 하지만 곧 큰 충격에 빠졌다. 아이히만은 아렌트가 상상한 괴물이나 정신병자가 아니었다. 그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했다. 단지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가 결여된, 진부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런 이가 나치의 사회 시스템이 요구하는 구실과 책임을 군말 없이, 충실히 이행한 건 어찌면 당연했다. 이로 인해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악의 진부함(The banality of evil)을 논하게 됐다.

우리 주변의 악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용산 참사의 책임자였던 김석기는 경찰 내부에서 평판이 좋았다고 한다.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충실한 경찰이었다고 한다. 그러니 한나 아렌트의 말은 더없이 꼭 들어맞는다. 김석기도 아이히만처럼, 부당한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사고할 능력이 없었다. 사고 능력의 진부함이 6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악은 이렇게 태생적으로 진부하다. 그래서 악을 영화에서 매력적으로 가공하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인상 깊은 악당이 등장하는 재미있는 영화가 흔치 않은 현실엔 이런 이유가 큰 몫을 하지 않나 싶다.

우원석 영화감독이 이번 호부터 (레프트21)에 정기적으로 영화 칼럼을 쓴다. 그는 뉴욕에서 영화 공부를 했고 지금 작품을 준비중이다.

〈싸구려 커피〉가 보여 준 ‘인디’의 가능성

대중음악의 새로운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아무리 <조선일보>가 “습작 수준”이라거나 “[가사는] 삶을 반영하지 못하고 …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도 부족”하다고 깎아내려도,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는 크라잉넛의 〈말달리자〉에 비견할 대중적 공감을 얻고 있다.

“아직 덜 갠 하늘이 너무 가까워 숨 쉬기가 쉽잖아”거나 “장판이 난지 내가 장판인지도” 모르겠다는 허탈함, 웃는 듯도 하고 우는 듯도 한 읊조림은, 독특한 자조와 해학을 보여 준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짓눌린 ‘88만 원 세대’는, 10년 전에 <말달리자〉가 표현한 분노와 지배 질서 전반에 대한 적대감에 사람들이 열광한 것처럼 〈싸구려 커피〉에 열광했다.

〈싸구려 커피〉를 비롯한 ‘인디’ 음악이 가진 가능성을 설명하려면 그것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인디’ 음악의 비상한 성장은 1987년 이후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향상 위에서 축적된 음악적 역량이, 경제 불황이 낳은 정서들과 조응한 결과다.

1997년 초 IMF와 함께 ‘해성처럼’ 등장한 크라잉넛을 비롯한 펑크 밴드들은 상품 논리가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서민의 분노와 박탈감을 표현한 바 있다.

불황이 빚은 절망감과 현실 도피 욕구, 소외를 표현하는 — ‘모던록’이라는 모호한 범주에 속한 — 다양한 솔로·밴드가 등장했고, 내면 세계와 개인이 처한 현실을 담담히 표현하는 데 탁월한 장르인 포크가 재조명받았다. 또, 풍부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댄스 음악의 외장재쯤으로 생각되던 힙합이 독자적 장르로 성장했다.

그 결과, 한국 ‘인디신’은 소규모 마니아들의 모임에서 음악적 영향력을 가진 공간으로 발전했다. 구성원도 변했다.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불안한 미래를 고민하는 요즘의 ‘인

디’는 열악없는 ‘88만 원 세대’다.

지배 질서에 비판적인

지난 10여 년간 중요한 대중 운동들이 등장했다. 자기표현 욕구가 한껏 늘어났고, 특히 지난해 촛불 항쟁에서 두드러지게 그랬다. 정치 영역에서 지배 질서에 비판적인 새로운 세대를 낳은 역동성이, 대중음악 영역에서도 새로운 발전을 낳았다.

몇몇 유명 가수들은 집회장에서 노래했다. 대중 운동은 — 촛불집회 참가 때문에 <윤도현의 러브레터>에서 퇴출됐다는 ‘소문’이 돌았던 — 윤도현밴드의 새 앨범에도 분명한 흔적을 남겼다. 저항을 호소하는 <깃발>이나 촛불에 따뜻한 연대의 인사를 보내는 <후회 없어> 같은 노래는 진보적 청년들의 마음을 뒤흔든다.

더 많은 음악인들이 시위대의 일부로 함께 행진했다. 그 중 소수는 현재까지 이런저런 운동에 연대하고 있다. 폴트폴텍 노동자 지지 기금 마련을 위한 공연에는 이른바 ‘민중가수’들 외에도 “정치와는 답을 쌓았던 음악인들까지 선뜻 참여했다.”(대중음악평론가 서정민갑)

이명박 정권에 대한 풍자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매김 했다. 4월 4일 반전집회에서 공연한 ‘잡리스’처럼 풍자를 더 멀리 밀어붙인 솔로·그룹도 속속 나타났다.

경제 위기는 현실 도피를 부채질하는 음악이 설 자리가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88만 원 세대’의 현실을 노래하는 음악이 부각될 여지를 만들었다.

포크·포크록은 사람들의 정서와 현실을 거칠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표현하는 장르 특유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국카스텐’처럼 분노와 소외, 탈출 욕구를 훌륭히 표현하는 밴드들이 주목받고 있다. 장르 간 크로스오버 실험도 보편적 현상의 일부가 됐다.

어떤 경우에도 음악의 메시지가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는 듯하다. 이 말이 곧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솔로·밴드가 대폭 늘었다는 뜻은 아니다. 여전히 현실 도피적이거나 심지어 우익적인 메시지를 표현하는 솔로·밴드도 많다. 그러나 형식적 완성미를 추구하느라 별다른 내용을 담지 못하기도 하던 것에 비하면 좋은 일이다.

예술적 실험이 반드시 사회적 격변에 비례한다는 주장은 기계적이지만, 사회적 격변은 분명히 사람들의 정서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다. 음악도, 그것이 인간의 창조물이기에, 비록 음악가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사회적 정서를 일부 반영한다. 즉, 새로운 시대를 향한 사람들의 자신감이 늘어날수록 새로운 대중음악 실험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김준호



대중운동은 음악에도 영향을 미친다 — 촛불집회에서 노래하는 윤도현 사진 이미지



〈똥파리〉

시공창에 던져진 소외 계층의 삶

“단지 저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것뿐입니다.”

영화 <똥파리> 시사회장에서 “노점상을 강제 철거 하는 용역들이 등장하는 영화 속 장면이 ‘용산 참사’와 관련지어 의도적인 설정이 있었나요?” 하는 질문에 이 영화의 감독이자 주연배우인 양익준 감독이 한 말이다.

소통할 수 있는 언어는 욕이요, 감정 표현은 주먹뿐인 상훈. 매일같이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상훈은 더러운 배설물 주위를 맴도는 ‘똥파리’ 같은 삶을 산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사채빚을 걷거나 ‘용역 깡패’ 일을 한다. 그는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 노점상인들 그리고 대학 등록금 집회를 여는 대학생 등을 찾아가 가져없는 폭력을 일삼는다.

그는 아버지한테서 겪은 고통을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을 통해 치유받으려 한다. 상훈은 우연히 ‘영희’라는 여고생을 알게 된다. 얼핏 보기엔 그 어떤 공통점도 발견할 수 없지만 비슷한 환경 속에서 내면의 상처를 간직한 이들은 서로를 단번에 알아본다.

그리고 어느덧 그들은 서로 아픔을

보듬어 주는 ‘친구’가 된다. 역시나 그들의 언어는 아무렇게나 툭툭 내뱉는 욕설이지만 그들만의 언어는 세상의 그 어떤 언어보다도 파스하다.

영화 <똥파리>는 가족으로 인해 상처 받은 인간들의 모습과 그 폭력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채 폭력의 되물림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숙명적 상황을 보여 준다.

좀더 큰 틀에서 이 영화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부조리 즉, 소외계층들의 처절한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그것이 곧 한 개인의 문제만으로 국한

될 수 없다는 점을 폭로한다.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이는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현실’임을 절감했다.

‘똥파리’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 깨끗한 저 세상으로 한걸음 내딛기 위해 발버둥치는 순간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남기며 쓸쓸히 끝맺음 하는 영화 <똥파리>.

결코 유쾌하지만은 않은 이 영화는 씁쓸한 물음과 함께 끊임없는 고민을 던져 준다.

고아영

칼럼/논설

정성진 칼럼

세계 대공황, 끝은 아직 멀었다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마르크스주의 연구》 편집위원장

지난 3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주요 증시가 크게 올랐다. 또, 올해 1/4분기 미국의 소매 판매가 1퍼센트 증가하고, 지난 3월 중국의 구매관리자 지수가 플러스로 반전되는 등 몇몇 실물경제 지표도 오랜만에 호전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2007년 여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이 바닥을 치고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얼마 전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이 IMF 기금을 추가 조성하는 데 합의하는 등 얼마간의 성과를 올린 것도 세계 경제 위기가 바닥을 친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의 배경이 되고 있다. 비관론자로 유명한 뉴욕대학 루비니 교수조차 이번 경제 위기가 빠르면 올해 말 끝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같은 세계 경제 위기 바닥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1930년대 대공황의 경험에서 보듯이, 경제 전체가 중장기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가의 일시적 반등을 포함한 경기의 일시적·국지적 회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필자는 이미 1년 반 가까이 계속된 세계 경제 위기(그것만으로도 이미 제2차세계대전 후 최악의 경제 위기이다)는 올해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세계 경제가 이번 위기 발발 직전인 2007년 초의 수준을 회복하려면 적어도 몇 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무엇보다 최근 주가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계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이윤을 저하, 과잉생산과 과소소비, 양극화와 글로벌 불균형 및 이로부터 비롯된 실물경제의 불황과 부실 금융자산의 누적 문제가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세계 전체에 걸친 실물경제의 위축은 전반적으로 호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0.5~1퍼센트 정도 위축될 것이며, 2010년 중반 이전에 세계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기존의 세계 경제 전망을 오히려 하향 조정했다. OECD도

30개 회원국의 GDP가 올해 4.3퍼센트 감소하고 실업률은 10퍼센트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유로 지역 제조업 신규 주문은 전년 동월대비 34.1퍼센트나 감소했다. 영국의 제조업 생산은 최근 3개월 동안 6.5퍼센트 감소해서 지난 40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WTO는 올해 세계 무역이 무려 10퍼센트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LO는 올해 세계 전체에서 5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3월 미국의 실업률은 8.5퍼센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1983년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미국의 소비 긴축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무엇보다 이번 세계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1970년대 이후 이윤율의 장기저하가 지속되고 있다. 며칠 전 〈블룸버그통신〉은 2009년 1/4분기 중 S&P 상장 500대 기업의 이익이 무려 37퍼센트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익성의 지속적 악화와 함께 과잉생산과 과잉설비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미국 제조업의 가동률은 68퍼센트였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주지하듯이, 이번 위기는 미국의 주택 가격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된 2007년 여름 서브프라임 모지기 부실 위기가 ‘마이너스’ 자산효과를 작동시켜 소비를 감소시키고 이것이 다시 일본·독일·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의 대미 수출을 감소시켜 세계 실물경제의 위기로 확산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세계의 실물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세계 경제의 엔진이었던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에서 진행된 주택 가격 폭락 등 자산 거품 붕괴를 감안할 때 ‘마이너스’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 긴축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주택 가격 하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1월 미국 도시 주

택 가격은 다시 2.8퍼센트 감소해서 1년 동안 19퍼센트나 하락했다. 이는 2006년 중반 고점 대비 30퍼센트 이상 하락한 것이다. 그래서 주택을 포함한 미국의 가계 순자산은 2007년 중반 64조 4천억 달러에서 2008년 말 51조 5천억 달러로 무려 20퍼센트나 감소했다. 게다가 최근 실업 증가와 임금 동결(또는 인하)로 인한 대중의 구매력 위축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소비가 세계 경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이번 세계 대공황을 촉발시키고 그 극복을 어렵게 하고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손실 문제, 특히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문제가 최근 주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그동안 은행은 손실 상각, 자본 확충을 상당히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 때문에 여전히 대출을 꺼리고 있다. 실제로 런던 은행간 대출금리(LIBOR)는 아직도 연방기금 금리보다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 전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1조 달러 이상의 부실채권을 이른바 민관합작 방식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은행주를 비롯해서 주가가 오른 것은 주로 이 ‘가이트너 효과’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바마에게 남아 있는 위기 대응 수단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연방기금 금리도 제로 수준으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미 수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 구제금융 등으로 미국 재정적자가 과도하게 늘어나,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제 미국 정부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서 팽창 정책을 쓸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번 가이트너의 은행 부실채권 매입 방안이 실패로 판명될 경우(스티글리츠, 크루그만은 물론 대다수 미국 주류 경제학자들조차 이 방안이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미국 경제 위기, 따라서 세계 대공황은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마이크 데이비스 칼럼

오바마 시대, 미국 좌파의 과제

마이크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 캠퍼스 역사학과 교수 / 미국의 정치 활동가이자 도시 이론가

나는 지난해 11월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했을 때 ‘오바마가 제2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될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졌다. 성격이나 도덕적 신념, 평범한 미국인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 무엇보다도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오바마는 확실히 루스벨트가 될 수도 있다. 링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뉴딜을 만든 진정한 동력은 루스벨트가 아니라, 작업장을 점거하거나 엄동설한에 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일자리를 요구한 수백만 명의 평범한 미국인들이었다. 그들이 뉴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힘이 워싱턴 정치를 왼쪽으로 움직였다. 1930년대 미국 노동자와 민중의 위대한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날 루스벨트가 그토록 높이 평가받지 못했을 것이다.

루스벨트는 네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인들에게 ‘경제 권리 장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경제 위기를 벗어나려면 새로운 경제 권리 장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힘이 강화되어야 한다. 1950~60년대 전후 황금기에는 임금 상승이 생산성 향상에 연동하는 등 거시경제에서 노동자, 특히 노동조합의 힘이 막강했다. 노동조합의 힘이 막강할 수 있었던 것은 노조에서 기층 노동자들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힘은 1970년대 말과 레이건 시기를 거치며 약해졌다. 이 힘이 다시 강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오바마의 구제 정책과

경기부양책이 실패하고 미국 경제가 고통스런 장기 침체에 빠져들면 우익 선동가들이 대중의 분노를 이용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공화당에서 반(反)이주민적 국가주의 정서가 가장 강한 분파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현재 남캘리포니아 국경 지역에 사는데, 이곳은 원래 반공주의 공화당 분파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소련이 몰락한 뒤로 그들은 공산주의 대신 멕시코 이주민들을 새로운 적으로 삼았다. 이들이 일자리 부족의 원인을 경제 위기가 아니라 이주민에게 돌리면서 영향력을 확대할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미국 좌파들은 노동자 운동과 사회 운동의 상식을 요구로 정식화하는 일을 해야 한다. 예컨대, 금융체제의 붕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금융 위기에 책임이 있는 부자들을 구제하려고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면 좌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국가가 사실상 금융체제를 소유하게 됐다면 금융체제를 공공 소유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주거, 교육,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 정책을 펴는 데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다시 말해 미국 좌파의 임무는 누구에게 권력이 있고, 사회 제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대안은 지금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이기보다는 상식적

일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 미국 좌파·진보세력·자유주의자들이 오바마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도자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민주당 우파와 공화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을 입안할 때 공화당의 눈치를 보고, 공화당이 입법 과정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는 클린턴 대통령의 전례를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월스트리트 저널〉과 헤리티지재단 등은 오바마가 ‘계급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맞다, 지금 계급전쟁이 필요하다. 미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심도 깊은 개혁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힘이 강해야 그런 개혁을 도입할 수 있다. 더 많은 저항이 필요하다. 거리가 더 시끄러워져야 한다. 결국 정당과 정치 지도자 들은 사회 운동이 작업장과 거리에서 이미 성취한 것을 법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현 상황을 볼 때 앞으로 1~2년 안에 미국 좌파들이 급진화한 새 세대의 수혈을 받을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 좌파의 존재, 즉 급진적 사회·경제 비판과 이기심·경쟁의 법칙을 뛰어넘어 더 나은 세계를 바라는 상상력이 있을 때만 지금 미국에 필요한 진지한 토론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번역 김용욱 기자



논설

MB의 공세에 맞서 저항을 건설해야 할 때

박연차 비리 추문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마침내 노무현이 고개를 숙였다. 검찰의 칼날이 턱 밑까지 들어오자 노무현이 비리 사실을 실토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정세 반전을 꾀하기 위해 박연차 비리 추문을 이용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언론노조의 저항에, 올초에는 용산 참사 항의 운동과 언론 노동자 투쟁에 밀려 MB악법 강행 시도가 좌절됐다. 몇 달이나 정국 주도권을 잃었던 것이다.

여권은 더는 밀려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에 쫓겼다. 그래서 꺼내 든 것 중 하나가 박연차 비리 추문이다. 이재오의 급거 귀국도 이런 다급함에서 비롯한 것 같다.

이명박은 노무현의 ‘패밀리’인 박연차를 공격하면 자신의 최대 정적인 노무현과 민주당에 정치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계산했을 것이다. 그리 되면 노무현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운동 내 일부를 위축시키는 효과도 낼 수 있다.

문제는 이 나라 지배자들 누구도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부패는 과일 상자 안에 있는 일부 썩은 사과 같은 게 아닌 것이다. 노무현과 민주당만이 아니라 친이명박 계 인사들과 대통령 ‘형남’마저 박연차 리스트에 올라 있다.

사실, 부패가 정치의 전면에 부상했다는 것은 지금이 권력 이동과 정치·경제 위기의 시기임을 뜻한다. 이때 바로 정치와 기업의 관계가 밝히 드러나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경제 위기 때문에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한 이명박의 공세는 무엇보다 운동을 향해 있다. 특히 민주주의와 언론 탄압이 급심하다.

이 정부 하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온데간데없다. 최근 경찰은 ‘상습 시위꾼’을 수사한답시고 소환장을 마구 발부하고 있다. 〈조선일보〉사주가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이제 삼척동자도 안다. 그러나 경찰은 힘깨나 쓴다는 자들 앞에서는 쫄쩍 땀다. 그러면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잔혹하고 폭력적으로 대한다. 지금 경찰은 자신의 존재 이유가 결국 부자들(과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검찰은 다시 MBC 〈PD수첩〉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PD수첩〉이 광우병을 보도하면서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했다. 〈PD수첩〉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려는 것이다.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마치 지난해 촛불 시위대가 〈PD수첩〉의 왜곡 보도에 부화뇌동한 것처럼 몰아간다.

정권 차원에서 MBC를 상대로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여기에 광고 수입마저 대폭 감소해(들리는 얘기로는 40퍼센트 가량 줄었다고 한다) 경영 압박을 느낀 MBC 사측은 정권의 압력에 굴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측은 〈뉴스 데스크〉신경민 앵커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진행자 김미화 씨를 교체하려다 내부 반발에 밀려 일단 보류했다.

검찰의 MBC 압수수색 시도는 단지 MBC 〈PD수첩〉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MB악법 강행 통과 기도를 연거푸 좌절시킨 언론노조를 사실상 정조준한 것이다. MBC노조는 그 언론노조의 선봉대이자 중심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노조가 미디어발전국민위에 있을 까닭이 없다. 한나라당 쪽의 사실상 태업으로 논의는 고사하고 심지어 회의 공개를 합의하는 데만 20일이 걸렸다. 애초 언론노조가 목표로 삼았던 대국민 선전 공간조차 못 되는 상황이다. 언론노조는 즉각 투쟁 태세를 갖추고 MB의 언론 탄압에 대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공간 탄압은 북한 로켓 발사를 빌미로 더한층 강화될 개연성이 크다. 그러므로 현 상황의 핵심 특징이 단순히 지배자들 간의 권력 쟁투가 아닌 것이다. 계급간 투쟁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5월 1일 메이데이 집회를 대규모로 조직하겠다고 밝힌 것은 잘한 일이다. 메이데이를 이명박의 반동에 일격을 가하는 전기(轉機)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이명박의 반동에 맞서 싸워야 한다. 당장 쌍용차의 대량 해고에 맞선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민생민주국민회의도 스스로를 상층 로비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런 투쟁들을 열의 있게 호소하고 참여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절실할 때 아닌가.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 3만 원
2년(52개 호) | 6만 원

www.left21.com | left21@left21.com | 02-777-2792
계좌번호(명의: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레프트21



4월 8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는 3천여 명의 노동자가 모여 2천6백50여 명 정리하고 계획을 규탄했다.

사진 제공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정부는 쌍용차 국유화로 고용을 보장하라

쌍용차, 2천6백50여 명 정리하고키로

쌍용차가 4월 8일 결국 전체 인력의 37퍼센트인 2천6백50여 명을 정리하고 하겠다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사내 복지 중단·임금 체불과 비정규직 해고에 이어서 마침내 정규직 대량해고에 나선 것이다.

4월 6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일방적 회생의 구조조정안 발표에 결코 동의할 수 없”고 “구조조정안 철회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4월 8일 평택공장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는데 3천여 명이 모일 정도로 분노가 컸다.

쌍용차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자들은 매각을 추진한 정부와 투기자본인데 노동자들에게 모든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 이미 비정규직 수백 명이 해고됐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저녁과 휴일에는 대리운전·막노동 등을 하고 있고 부인들도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

더구나 쌍용차에서 대량해고는 다른 작업장과 부문으로 도미노처럼 번져갈 것이다. 따라서 쌍용차에서부터 이런 대량해고를 막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쌍용차 노동자들은 국유화를 통한 고용보장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해외자본이 아닌 국내자본으로의 제3자 매각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그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외국

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노동자 출자, 국민주 공모, 경기도, 경기도민 출자”를 통한 국민기업·지역기업화를 제시한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쌍용차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보장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충당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노동자 출자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시장 경쟁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을 깎고, 노동조건 악화와 노동 강도 강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모순에 처한다.

공장 점거 파업

중요한 것은 국유화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정부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막아내고 고용을 보장하는 국유화를 쟁취하려면 강력한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단호한 공장 점거 파업과 연대 파업을 통해서만 국유화를 쟁취할 수 있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던 세계 지배자들이 곳곳에서

정부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막아내고 고용을 보장하는 국유화를 쟁취하려면 단호한 공장 점거 파업과 연대 파업이 필요하다.

국유화를 추진하는 지금이야말로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한 국유화 요구를 진지하게 내걸고 투쟁할 때가 아닌가.

따라서 쌍용차 노조 지도부는 더는 임금 삭감·순환 휴직 등을 수용하며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 악마는 팔 하나를 내주면 몸통이 전체를 먹어 치우려 하는 법이다. 노조가 사내복지 중단과 비정규직 해고 등을 행동으로 저지하지 못하는 동안 사측은 공격을 확대해 왔고 결국 대량해고를 발표한 것이다. 4월 7일, 노조가 비정규직 고용과 신차 개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22퍼센트의 추가 임금 삭감까지 받아들여겠다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대량해고안을 발표한 것을 보라.

이제 더는 양보안을 제시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아야 한다. 양보교섭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다 점거 파업의 때를 놓쳐 패배해 대량해고를 당했던 2001년 대우차의 쓰라린 교훈을 새겨야 한다.

사측이 5월 8일 노동부에 해고자 명단을 제출하고 6월 8일 해고를 실행하겠다는 상황에서 국유화를 통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단호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공장을 점거해서 파업 대열을 결집시키며 연대의 초점을 제공하고 사회적 여론을 일으키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쌍용차의 오늘은 다른 작업장들의 내일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도 강력한 연대 투쟁과 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강철구

4월 3일 금속노조 결의대회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노동자를 살려라!”

4월 3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결의대회에는 노동자들 4천여 명이 참가했고 절반 정도가 쌍용차 조합원들이었다.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휴업과 임금 삭감으로 생계가 너무나 힘들다고 호소했다.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한 조합원은 “모든 것을 줄이고 없애고 있다. 전에는 되던 은행대출도 지금은 안 된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전했다. 한 조합원은 “신용불량자가 2천 명이 넘는다”, “휴무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나이트 분들은 그나마도 자리가 없다”,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쌍용차에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만 대안이라고 내놓는 것에 노동자들의 분노는 대단했다. 한 노동자는 “처음에는 쥐죽은 듯 조용히 있어야 할지 감동이 많았다. 몇 달간 머리가 복잡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하면 나가는 사람들은 나가서 죽는다. 남아 있는다고 해서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느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노동자들을 살려야 할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집회에는 위니아만도나 GM대우 등의 노동자들도 많이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쌍용차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는 것이 다른 사업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기아차에서 온 이동진 조합원은 1998년 기아차의 경험을 떠올리며 “고통분담은 노동자들은 다 죽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같은 말도 안 되는 데 돈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 보장에 돈을 써야 한다”고 했다. 위니아만도의 한 노동자도 “단위사업장의 싸움 가지고는 어렵다,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다”고 현장의 정서를 전했다.

정부와 기업주들에 맞서 국유화 등을 통한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건설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조명지

5·1 범국민대회로 항쟁의 촛불을 점화해야

민주노총은 4월 7일 ‘119주년 세계노동절 및 국민촛불 1주년 2009년 민생살리기·민주주의살리기 5.1절 범국민대회’(가안)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민주노총 임성규 신임 위원장이 밝힌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제대로 된 투쟁에 매진”하는 “사회연대노총” 준비의 일환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신승철 사무총장은 “조직위는 민중진영뿐 아니라 대학생,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들과 함께 5.1절 범국민대회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계기로 5·6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범국민항쟁의 촛불을 점화”시키고, “정규직,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학생, 저소득 자영업자, 빈민까지 포괄”하는 연대투쟁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이런 연대투쟁을 위해 만든 민생민주국민회의가 민주당까지 포함한 야4당과 ‘정책공조’만 강조하며 반이명박 저항의 구심 구실을 못 하던 차에 민주노총이 나선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민주노총이 나서자 민생민주국민회의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나는 민주노총이 제안한 조직위가 폭넓은 민중·시민·사회단체 들을 끌여

들여 임성규 위원장이 주장했던 “노동자 서민의 아들딸이 무료로 교육받는 제도, 돈 없이도 평등하게 치료받는 공공의료제도, 에너지 물 교통 방송 등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조직위는 다양한 단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방적으로 제안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이명박은 개악 ‘속도전’을 위해 ‘상습시위꾼’ 무더기 소환장 발부와 체포, MBC 압수수색, 고대 출교생들에 대한 재공격 등 파상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민주노총이 반격의 구심이 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반민주주의 정책에 맞서 저항의 촛불을 점화해야 한다.

최영준 ‘다함께’ 운영위원